대학원생 실태진단

2017. 10.

국회의원 유은혜 (경기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우리나라 대학원은? ......................................................... 1

2. 대학원의 양적팽창 .......................................................... 5

3. 양적 팽창 부추긴 대학원 정책 ............................................. 11
   1) 대학원 팽창 정책 .................................................. 11
   2) 대학 구조조정에도 대학원은 팽창 .................................. 16

4. 대학원은 “돈 먹는 하마” .................................................. 20
   1) 학부보다 월등히 비싼 대학원 등록금 ............................ 20
   2) 대학원만 등록금 안상?! ........................................... 24
   3) 대학원도 세계 최고수준 등록금 .................................. 28
   4)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 .............................................. 29

5. 대학원생은 현금출납기 - 기타 납부금 .................................. 32

6. 공부하다보니 빚더미?! ...................................................... 38
   1) 이상한 나라의 장학금 .............................................. 38
   2) 학자금 대출은 필수?! .............................................. 42
7. 대학원생 인권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 47

8. 끊이지 않는 학생연구비 갈취 ......................................................... 52

9.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 58

10. 고(高)스펙 취업난 시대 ................................................................. 63

11. 학문·연구 대가 끊긴다?! ............................................................... 71

12. 대학원 발전을 위해! ................................................................. 77
표 차 례

 表 1-1 대학원 교육목적, 학위과정, 특징 .......................... 2
 表 1-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또는 전공) 설치 기준 .................. 3
 表 1-3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요약 ........................................... 4
 表 2-1 199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현황 .................................. 6
 表 2-2 1990~2016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현황 ...................... 7
 表 2-3 2005~2016년 계열별 대학원 재적생 현황 .............................. 9
 表 3-1 1990년대 이후 대학원 정원 정책 제도 개괄 ......................... 13
 表 3-2 200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 17
 表 3-3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정원조정안 ........................... 18
 表 4-1 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 21
 表 4-2 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최고액 현황 ...... 23
 表 4-3 2010~2017년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 25
 表 4-4 2010~2017년 사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 26
 表 4-5 2010년 VS 2016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현황 .................... 27
 表 4-6 OECD 가입국 중 연간 평균 등록금 추정치 상위 국가 현황 ........... 29
 表 4-7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입학금 현황 ...................... 31
 表 5-1 2017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 32
 表 5-2 2017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 33
 表 5-3 2015년 VS 2017년 논문심사료 인상·인하 일반대학원 현황 .......... 34
 表 5-4 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1학기 기준) .......... 36
표 차례

〈표5-5〉 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1학기 기준) ........ 36
〈표6-1〉 2012~2016년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 38
〈표6-2〉 2016년 일반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 .................................. 39
〈표6-3〉 2016년 사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별 현황 .................................. 40
〈표6-4〉 2016년 국·공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종류별 현황 .................................. 41
〈표6-5〉 2012~2015년 대학 학비감면 현황 .................................................. 42
〈표6-6〉 2012~2016년 사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 43
〈표6-7〉 2012~2016년 국·공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 44
〈표6-8〉 2012~2016년 대학원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현황 .................. 45
〈표10-1〉 2011~2015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 64
〈표10-2〉 2012~2016년 전문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 66
〈표10-3〉 2012~2016년 특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 67
〈표10-4〉 2010~2013년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 68
〈표10-5〉 2012~2016년 대학 전임교원 최종학위 국적별 현황 .................. 69
〈표10-6〉 2016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전임교원 최종 학위 국적별 현황 .................. 70
〈표11-1〉 2017년 지역별 대학원 수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 73
〈표11-2〉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 (정원내) ........... 74
〈표11-3〉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분포 (정원내) .................. 75
〈표11-4〉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 76
〈표11-5〉 2016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중도탈락 현황 .................................. 76
그림 차례

〈그림3-1〉 1990~2016년 대학원 현황 .......................................................... 11
〈그림3-2〉 1990~2016년 대학원 재적생 현황 ................................................. 12
〈그림7-1〉 무당처우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 여부 .......................................... 48
〈그림11-1〉 2017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 71
〈그림11-2〉 2017년 지역별 전문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 72
〈그림11-3〉 2017년 지역별 특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 72
우리나라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원은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 만 설치 가능하지만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석사학위과정만 설치 가능하다.1)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2)

대학의 종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이 구분 되는데, 대학(일반대)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은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두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다. 대학원대학은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만을 둘 수 있다.3)

1)「고등교육법」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다 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 가능
2)「고등교육법」제29조의 3 (학위과정의 통합)
3)「고등교육법」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제2항
### <표 1-1> 대학원 교육목적, 학위과정, 특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일반대학원</th>
<th>전문대학원</th>
<th>특수대학원</th>
</tr>
</thead>
<tbody>
<tr>
<td>교육목적</td>
<td>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td>
<td>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td>
<td>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td>
</tr>
<tr>
<td>학위과정</td>
<td>석사, 박사과정</td>
<td>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계가능(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 가능)</td>
<td>석사과정</td>
</tr>
<tr>
<td>수여학위</td>
<td>학술학위</td>
<td>전문학위(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td>
<td>전문학위</td>
</tr>
<tr>
<td>교수·교사</td>
<td>학부와 연계</td>
<td>별도의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td>
<td>학부와 연계</td>
</tr>
<tr>
<td>수업형태</td>
<td>주간</td>
<td>주간</td>
<td>야간, 주말, 계절제</td>
</tr>
</tbody>
</table>

1) 수업형태는 2018학년도부터 학칙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으로 자율 운영(단, 과도한 야간, 주말수업 중단 학사운영 지양)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수업형태는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이란 교육목적에 따라 야간 또는 주간, 계절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은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수업형태를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으로 자율화 했 다.4)

대학원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5)

---

4)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2016.7.29.
5)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모두 2년 이상이며,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은 6년 이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통합과정은 4년 이상이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대학원 설치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사항이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과 매년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표 1-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또는 전공) 설치 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학원 신설</th>
<th>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th>
<th>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th>
</tr>
</thead>
<tbody>
<tr>
<td>일반대학원</td>
<td>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
<td>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
<td></td>
</tr>
<tr>
<td>전문대학원</td>
<td>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td>
<td>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
<td></td>
</tr>
<tr>
<td>특수대학원</td>
<td>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
<td></td>
<td></td>
</tr>
</tbody>
</table>

1)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2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안)’을 요약하면, 일반 및 특수대학원은 총 입학정원 순증, 상호조정, 자체조정, 학과(전공)신설은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은 법정 요건 준수여부 사전협의, 박사과정은 설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이라도 설치신청 시 사전 심사 및 승인 필요, 의...”

6) 「고등교육법」 제31조 (수업연한)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학사 및 석사 통합과정 - 2년 이내, 석사 및 박사 통합과정 - 1년 6개월 이내
##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 요약

### 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증원

- 총 입학정원의 순증 :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100% 이상 확보
- 사립대학 대상(국공립 대학 및 국립대 법인은 교육부 사전 심의 승인)
- 상호조정 1 :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 감축, 일반·특수대학원의 식사 입학정원 1명 증원(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2명 감축) 가능 판계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 및 최근 4년간 학사과정 평균 재학생 증원률 95% 이상 또는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의 경우 가능 조정 후 교원확보율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 상호조정 2 :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 감축, 식사 과정 2명 이상 증원 판계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 조정 후 교원확보율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 학과(전공) 신설 및 정원 조정 시 신설 요건 및 조정요건(순증 : 4대 교육여건 100% 증축, 상호 자제조정 :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모두 충족
  - 학위과정별 관련 분야 전임교원 확보
    - 식사 : 일반대학원 5명, 특수대학원 5명, 전문대학원은 신설 기준
    - 박사 : 일반 및 전문대학원 관련분야 전임교원 7명 이상
  -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와 연계 가능하나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확보, 단 경영 및 관련 전문대학원은 제외
  - 박사과정(일반) 신설 시 전임교원 강의비율 60% 이상 증축
  - 박사과정(일반·전문) 신설 시 7명 이상 관련분야 전임교원의 1/2 이상 연구실적 충족
  - 학·연·산 협동조정은 학과 신설 기준 및 운영 협약사항에 제한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대학원·학과 간 조정

- 대학원·학과(전공) 정원조정 시 교원확보율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 정원조정 시 각 대학원별 관련 법적 요건 등 충족, 학과(전공)간 교육여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 대학원 간 동일수준 학위과정 정원 조정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1 비율,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4:3 비율 적용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별 총 정원 범위 내 조정(교과 및 사대 교육대학원은 제외)
- 교지는 분리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교지(캠퍼스) 간 이동으로 정원이 증원된 교지(캠퍼스)는 교지, 교지기준을 100% 증축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20km를 초과한 대학협력심사위원회 단일교지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대학원 신설

- 일반 및 특수대학원 : 대학 자율(총 입학정원 순증, 상호조정, 자제조정, 학과(전공)신설 기준 증축 시) 가능
- 전문대학원 : 교원 및 교사실적 확보기준 충족,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2018학년도부터 관련 학부 폐지는 제외) 및 최근 3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 석사과정은 법정요건 준수여부 사전협의, 박사과정은 신설 사전 심사 및 승인(경역·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식사과정의 경우에도 사전 심사 및 승인
- 2018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학식·식사 통합과정’ 하용

---

*자료 :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안), 2017.*

---

### 표 1-3

<table>
<thead>
<tr>
<th>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증원</th>
<th>대학원 학과(전공) 신설</th>
</tr>
</thead>
<tbody>
<tr>
<td>• 총 입학정원의 순증 :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100% 이상 확보</td>
<td>• 학과(전공) 신설 및 정원 조정 시 신설 요건 및 조정요건(순증 : 4대 교육여건 100% 증축, 상호 자제조정 :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모두 충족</td>
</tr>
<tr>
<td>• 사립대학 대상(국공립 대학 및 국립대 법인은 교육부 사전 심의 승인)</td>
<td>- 학위과정별 관련 분야 전임교원 확보</td>
</tr>
<tr>
<td>• 상호조정 1 :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 감축, 일반·특수대학원의 식사 입학정원 1명 증원(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2명 감축) 가능 판계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 및 최근 4년간 학사과정 평균 재학생 증원률 95% 이상 또는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의 경우 가능 조정 후 교원확보율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td>
<td>- 식사 : 일반대학원 5명, 특수대학원 5명, 전문대학원은 신설 기준</td>
</tr>
<tr>
<td>• 상호조정 2 :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 감축, 식사 과정 2명 이상 증원 판계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 조정 후 교원확보율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td>
<td>- 박사 : 일반 및 전문대학원 관련분야 전임교원 7명 이상</td>
</tr>
</tbody>
</table>

---

*자료 :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안), 2017.*
대학원의 양적 팽창

2016년 기준 일반대학원은 184개로 일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이 189교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대학에 일반대학원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전문·특수대학원은 1,011개로 4년제 대학(일반, 산업, 교육) 1교 당 약 5개에 달한다.

대학원생(재직생)은 2016년 기준 33만 2,768명으로 대학(학부), 전문대학, 대학원 전체 학생 수(316만 3,937명)의 10.5%다.


이 시기 대학원은 주로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했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여러 유형의 대학원들이 등장하고, 대학원 관련 법규정들이 제정되면서, 더욱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로는 대학(학부)보다는 대학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8) 교육부,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취업통계편』, 2016, 84쪽.
9)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대상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2012, 54쪽.
표 2-1을 보면, 대학원은 1990년 303개에서 2016년 1,195개로 무려 892개 (294.4%)나 증가했다. 대학은 같은 기간 98교(40.7%) 증가했다.

일반대학원은 2016년 184개로 1990년(97개)보다 87개(89.7%)가 늘었다. 전문·특수대학원(11)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1990년 206개에서 2016년 1,011개로 무려 805개(390.8%)나 늘어났다.

표 2-1 199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현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학교수</td>
<td>증감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학</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년제</td>
<td>124</td>
<td>163</td>
<td>191</td>
<td>202</td>
<td>200</td>
<td>201</td>
<td>77</td>
<td>62.1</td>
</tr>
<tr>
<td>전문</td>
<td>117</td>
<td>145</td>
<td>158</td>
<td>158</td>
<td>145</td>
<td>158</td>
<td>138</td>
<td>138</td>
</tr>
<tr>
<td>소계</td>
<td>241</td>
<td>308</td>
<td>349</td>
<td>360</td>
<td>345</td>
<td>339</td>
<td>339</td>
<td>98</td>
</tr>
<tr>
<td>대학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td>
<td>97</td>
<td>106</td>
<td>129</td>
<td>145</td>
<td>167</td>
<td>183</td>
<td>184</td>
<td>87</td>
</tr>
<tr>
<td>전문</td>
<td>206</td>
<td>321</td>
<td>700</td>
<td>130</td>
<td>199</td>
<td>201</td>
<td>206</td>
<td>805</td>
</tr>
<tr>
<td>특수</td>
<td>776</td>
<td>772</td>
<td>813</td>
<td>805</td>
<td>813</td>
<td>805</td>
<td>805</td>
<td></td>
</tr>
<tr>
<td>소계</td>
<td>303</td>
<td>427</td>
<td>829 (17)</td>
<td>1,051 (34)</td>
<td>1,138 (40)</td>
<td>1,197 (47)</td>
<td>1,195 (46)</td>
<td>892</td>
</tr>
</tbody>
</table>

1) 4년제 대학 : 일반·교육·산업대학
2) 대학원 :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법·문교, 공과대학, 광학동, 경기동, 산업대학원 수)
3) 전문·특수대학원의 구분은 1997년 ‘대학원 규정’ 제정 이후로 구분되며, 2005년 이후 집계됨
4) 대학원 소계의 ( )는 대학원대학의 수(전체 대학원 수 에 포함)
5) 대학원대학은 1995년 ‘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이후 집계됨

4년제 대학이 2005년 이후 그 수가 정체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또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 2016년 전년 대비 8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2-2〉를 보면, 학생 수(재적생 수)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대학원 재적생 수는 33만 2,768명으로 1990년(8만 7,163명)에 비해 281.8%로 증가했다. 대학은 같은 기간 95.3% 증가했다.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대학</td>
<td>1,125,540</td>
<td>1,328,035</td>
<td>1,857,027</td>
<td>2,073,533</td>
<td>2,184,195</td>
<td>2,133,935</td>
<td>1,008,415</td>
</tr>
<tr>
<td>전문</td>
<td>323,825</td>
<td>569,820</td>
<td>913,273</td>
<td>853,089</td>
<td>767,087</td>
<td>720,466</td>
<td>697,214</td>
</tr>
<tr>
<td>합계</td>
<td>1,449,365</td>
<td>1,897,875</td>
<td>2,770,300</td>
<td>2,926,622</td>
<td>2,951,282</td>
<td>2,894,405</td>
<td>1,381,804</td>
</tr>
<tr>
<td>일반</td>
<td>36,560</td>
<td>47,021</td>
<td>79,828</td>
<td>88,862</td>
<td>89,201</td>
<td>87,970</td>
<td>51,410</td>
</tr>
<tr>
<td>석사</td>
<td>326,825</td>
<td>569,820</td>
<td>913,273</td>
<td>853,089</td>
<td>767,087</td>
<td>720,466</td>
<td>697,214</td>
</tr>
<tr>
<td>합계</td>
<td>51,054</td>
<td>65,756</td>
<td>111,542</td>
<td>120,601</td>
<td>120,717</td>
<td>114,417</td>
<td>103,828</td>
</tr>
<tr>
<td>전문</td>
<td>29,498</td>
<td>38,787</td>
<td>38,730</td>
<td>38,730</td>
<td>38,730</td>
<td>38,730</td>
<td>38,730</td>
</tr>
<tr>
<td>특수</td>
<td>2,694</td>
<td>6,942</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r>
<tr>
<td>석사</td>
<td>145,796</td>
<td>144,740</td>
<td>132,932</td>
<td>131,853</td>
<td>131,853</td>
<td>131,853</td>
<td>131,853</td>
</tr>
<tr>
<td>합계</td>
<td>36,109</td>
<td>48,080</td>
<td>117,608</td>
<td>158,930</td>
<td>171,719</td>
<td>170,583</td>
<td>170,583</td>
</tr>
<tr>
<td>석사</td>
<td>13,134</td>
<td>29,498</td>
<td>38,787</td>
<td>38,730</td>
<td>38,730</td>
<td>38,730</td>
<td>38,730</td>
</tr>
<tr>
<td>박사</td>
<td>2,694</td>
<td>6,942</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d>7,303</td>
</tr>
<tr>
<td>합계</td>
<td>145,796</td>
<td>144,740</td>
<td>132,932</td>
<td>131,853</td>
<td>131,853</td>
<td>131,853</td>
<td>131,853</td>
</tr>
<tr>
<td>석사</td>
<td>14,494</td>
<td>18,735</td>
<td>32,001</td>
<td>43,472</td>
<td>53,533</td>
<td>72,558</td>
<td>74,215</td>
</tr>
<tr>
<td>박사</td>
<td>14,494</td>
<td>18,735</td>
<td>32,001</td>
<td>43,472</td>
<td>53,533</td>
<td>72,558</td>
<td>74,215</td>
</tr>
<tr>
<td>합계</td>
<td>87,163</td>
<td>113,836</td>
<td>229,437</td>
<td>282,225</td>
<td>316,633</td>
<td>333,478</td>
<td>332,768</td>
</tr>
</tbody>
</table>

1) 4년제 대학 : 일반·교육·산업대학
2) 대학원 :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3) 전문·특수대학원의 구분은 1997년『대학원규정』제정 이후로 구분되며, 2005년 이후 집계됨
4) 특수대학원은 박사과정 없음
5) 대학원대학은 1995년『교육법』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이후 집계됨
※ 자료 : 교육부,「교육통계연보」각 연도.
일반대학원은 1990년 5만 1,054명에서 2016년 15만 4,882명으로 203.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문·특수대학원은 같은 기간 3만 6,109명에서 17만 7,886명으로 392.6%나 증가했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다.

학위 과정별 대학원생 증감을 살펴보면, 석사과정 학생수는 2016년 25만 8,553명으로 1990년(7만 2,669명) 보다 255.8%(18만 5,884명) 증가했다. 박사과정 학생수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412.0%로 1990년 1만 4,494명에서 2016년 7만 4,215명으로 5만 9,721명이 늘어났다.

석사과정 학생 수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10년 대비 2016년 4,547명이 줄어든 반면, 박사과정 학생 수는 오히려 급증해 같은 기간 2만 682명이 증가했다.

계열별 대학원 재적생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은 2005년 대비 2016년 전 계열이 증가했다. 공학계열이 1만 3,224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6,041명, 자연계열 5,726명 순이었다. 의약계열은 81명으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 (표 참조)

전문대학원도 2005년 대비 2016년 전 계열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사회계열이 1만 2,529명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의약계열이 9,039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사회계열 재적생수 증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며, 의약계열은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주요원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원은 2005년 대비 2016년 1만 3,943명이 감소했는데, 인문계열과 의약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이중 교육계열 감소폭이 가장 커 1만 6,455명이 줄었다.

대학원의 양적 평창은 경제발전에 따른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들어 "사회의 고학력 추세에 편
승하여 교원 및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대학의 위상 제고 방안 및 재정난 보완책으로 대학원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정책 또한 대학원 팽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표 2-3) 2005-2016년 계열별 대학원 재적생 현황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인문계열</th>
<th>사회계열</th>
<th>교육계열</th>
<th>공학계열</th>
<th>자연계열</th>
<th>의약계열</th>
<th>예체능계열</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2005년</td>
<td>14,505</td>
<td>21,863</td>
<td>6,552</td>
<td>28,634</td>
<td>19,280</td>
<td>18,429</td>
<td>11,338</td>
<td>120,601</td>
</tr>
<tr>
<td>2010년</td>
<td>17,668</td>
<td>25,683</td>
<td>8,807</td>
<td>33,156</td>
<td>22,100</td>
<td>17,518</td>
<td>12,600</td>
<td>137,532</td>
</tr>
<tr>
<td>2015년</td>
<td>18,113</td>
<td>28,594</td>
<td>9,855</td>
<td>41,377</td>
<td>25,068</td>
<td>18,866</td>
<td>12,944</td>
<td>154,817</td>
</tr>
<tr>
<td>2016년</td>
<td>18,506</td>
<td>27,904</td>
<td>9,886</td>
<td>41,858</td>
<td>25,006</td>
<td>18,510</td>
<td>13,212</td>
<td>154,882</td>
</tr>
<tr>
<td>총감 (’16-’05)</td>
<td>4,001</td>
<td>6,041</td>
<td>3,334</td>
<td>13,224</td>
<td>5,726</td>
<td>81</td>
<td>1,874</td>
<td>34,28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문</th>
<th>특수</th>
</tr>
</thead>
<tbody>
<tr>
<td>2005년</td>
<td>5,298</td>
<td>14,804</td>
</tr>
<tr>
<td>2010년</td>
<td>7,317</td>
<td>17,877</td>
</tr>
<tr>
<td>2015년</td>
<td>8,098</td>
<td>21,252</td>
</tr>
<tr>
<td>2016년</td>
<td>8,460</td>
<td>21,405</td>
</tr>
<tr>
<td>총감 (’16-’05)</td>
<td>3,162</td>
<td>6,601</td>
</tr>
</tbody>
</table>

1)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2) 일반-전문대학원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합산기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만 있음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러나 “대학원은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은 미흡”

12) 이정미 외,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18쪽.
하고, “대학의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과다한 석·박사 인력을 배출”(4)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 이정미 외,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25쪽.
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방안, 2012, 72쪽.
3 양적 팽창 부추긴 대학원 정책

1) 대학원 팽창 정책

우리나라 대학원의 급격한 팽창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 증대가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고학력화 추세에 편승한 대학들의 무분별한 대학원 설치와 이를 조장한 정부 정책에 있다.

〈그림3-1〉과 〈그림3-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원 수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3-1〉 1990~2016년 대학원 현황

1995~2005년 대학원 팽창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1995년 발표한 정부의 ‘5.31 교육 개혁안’이다. 동 방안에는 △대학정환 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단설 전문대학원 (대학원대학) 설치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추진 등의 정책을 담고 있어, 대학원 팽
창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31 교육개혁안’으로, 1996년 대학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고, 1998년에는 ‘대학학생정원령’과 1997년 제정된 ‘대
학원규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대학원 학생정원 또한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일정한 교육여건 기준
을 충족하면 정원 확대와 대학신설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대학들의 무분별한 대학원
신설 및 정원확대를 불러왔다.

<그림3-2> 1990~2016년 대학원 재적생 현황

또한 1995년 당시 ‘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원대학을 도입하고, 교육대학에도 대학원
을 둘 수 있도록 했다.

1997년에는 교육대학과 개방대학에 특수대학원 설치를 ‘명문화’했다.15) 2000년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했다.

15) 이전까지 개방대학의 대학원은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산업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한편, 대학원대학은 도입 된지 불과 5년 사이에 17개(2000년 기준)나 설립되었는데,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원대학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쉬워 낙설 정향”를 보이며, “종교계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맞물려 오히려 동일 목적으로 저닌 소규모 대학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able>
| 1995년 | • 5·31 교육개혁안 발표  
• 단설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제도/대학설립준칙주의/대학 정원 자유화 정책 추진  
• 교육법 개정 대학원대학 도입 |
| 1996년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
| 1997년 | • 대학원규정 개정 : 대학원 일반/특수/전문대학원으로 구분,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
| 1998년 | • 대학원규정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 교육대(산업대) 특수대학원 설치 명문화 |
| 2000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개정 교육, 개방대(산업대) 전문대학원 설치 화용, 교육원 입학정원 개입별 입학정원에서 대학원별 입학정원으로 변경 |
| 2002년 |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 발표 |
| 2005년 |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
| 2006년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
| 2007년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대학원 설치기준 명문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대학원 학생정원 기준 명문화 |
| 2008년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 2009년 |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 2011년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학사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상호조정 하용 |

'5·31 교육개혁안'에 따른 일련의 법령 제·개정이 대학원 양적팽창의 기반이 되었

---

16) 교육부, 대학원제도 개선 기본계획(시안), 1999, 4쪽.
17) 이정미 외,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28쪽.
다만, 실질 대학원의 정원 증원과 신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6년 "대학원학생 정원 조정 지침"을 살펴보면, 교수확보율(63%), 교사확보율(일정비율 미달 동결 검토)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연계해 정원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이 77.0%였음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교육 여건 기준이 높지 않아 정원증원이 어렵지는 않았다. 학과신설은 일반대학원은 석사 과정 소속 교원 6명, 박사과정은 7명 확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박사과정은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및 발표논문 수 지표도 참고했다. 반면, 전문·특수대학원18)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정립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교육 수요를 가능한 수용"하는 다며, "대학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의 요구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원의 양적 팽창은 계속됐다. "2000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정원 자율화 기준인 교원확보율 55%이상(전년 60% 이상), 교사확보율은 50%이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여건 확보계획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여건 기준을 낮춰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여건 ‘확보’가 기준이 아니라 교육여건 ‘확보계획’이 기준이 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은 정원 증원을 포함하여 자율운영20)하기로 해 특수대학원 증가를 부추겼다.

다만, 대학원 신설의 경우 일반대학원은 교원확보율 100% 확보계획이 필요했으며, 전문대학원은 「대학원규정」제3조에 의한 교원기준21)과 별도의 교사시설을 확보해야 했다.

18) 대학교육연구소, 전임교원 확보 현황,『대교연통계(기본)』, 6권, 2013, 2쪽.
19) 당시에는 「대학원규정」(1997) 제정 이전으로 전문, 특수대학원의 구분이 없었음
20) 신설의 경우에만 요건심사를 진행, 기존 충족 시 모두 허용. 정원 증원 시에는 과학과학원 증원의 경우가 아니면 대학 자율 조정
21) 「대학원규정」제3조는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계열별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 산출 기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음. 다만 교원의 2/3이상은 전
이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기준은 점차 강화되였지만, 대학원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 대학원의 급격한 양적팽창이 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동 방안에는 “대학원 구조개혁” 내용이 담겼는데, 대학원의 적정규모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충원율 등을 감안한 정원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 통합 및 정원 감축”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원 신설, 석·박사과정 설치 및 대학원별 운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기본계획”에서는 대학원 정원 적정 자율 기준을 교원·교사확보율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사업) 확보율(55%이상)을 추가했다. 특수대학원도 학과 신설시 학부에 관련분야 전임교원을 3명 이상 확보토록 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사업)을 100% 이상 확보해야 정원 증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대학원 교육은 양적 팽창보다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립대학원 증원은 기본적으로 억제하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가 조정하기로 했다. 단, 국가전략 분야, 기초학문 분야, 타 부처에서 요청한 분야의 증원과 대학 구조 조정 및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특수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23)

또한 교육부 장관의 지침으로 정해져 오던 대학원 설치 기준과 정원책정 기준 등

입교원으로 확보하되, 이중 1/3은 경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배치 가능
22) 대학원 정원확대 기준인 교원확보계획을 2001년 60%, 2002년 65%, 2003년에는 80%로 확대됨. 대학원 학과신설의 경우 석사과정은 전임교원 5명, 박사과정은 전임교원 7명 확보하도록 함. 2003년부터는 박사과정 신설 시 확보해야하는 교원의 일부는 일정기준이 이상의 논문실적을 요구.
을 2007년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함으로서 법령화 했다. 이후 2009년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박사과정 신설시 확보 교원의 연구 실적 기준을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원 정원 증원 및 조정, 신설 등의 기준은 조금씩 강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2) 대학 구조개정에도 대학원은 팽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양정 팽창을 반복해왔던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정원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원과 연계된 정원감축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대학 퇴출을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정 정책을 펼쳤다.

이명박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 받아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했으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입학생정원감축에만 매몰되어 고등교육 발전의 방향과 목표가 없음 등 지역과 규모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교육의 질 보다는 소모적 경쟁만 확대 고등·비리대학에 대한 특혜 대학을 기업 ‘하청기관’으로
전략 시켰다는 비판\(^{24}\)을 받은 바 있다.

대학 입학정원 감축 과정의 문제점은 많지만, 실제 입학정원은 2005년 35만 3,436명에서 2016년 32만 4,14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정원은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대비 2016년 약 7천명이 늘어났다.(\(<\text{표 3-2}>\) 참조)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대학원 정원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부정원 감축을 전제로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text{표 3-2}>\) 2000~2016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년</th>
<th>2005년</th>
<th>2010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증감 ('16-'05)</th>
</tr>
</thead>
<tbody>
<tr>
<td>대학(학부)</td>
<td>347,365</td>
<td>353,436</td>
<td>344,031</td>
<td>333,807</td>
<td>324,149</td>
<td>-29,287</td>
</tr>
<tr>
<td>대학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td>
<td>53,697</td>
<td>57,581</td>
<td>57,562</td>
<td>63,612</td>
<td>63,567</td>
<td>5,986</td>
</tr>
<tr>
<td>전문·특수</td>
<td>53,805</td>
<td>66,330</td>
<td>69,183</td>
<td>67,110</td>
<td>67,351</td>
<td>1,021</td>
</tr>
<tr>
<td>소계</td>
<td>107,502</td>
<td>123,911</td>
<td>126,745</td>
<td>130,722</td>
<td>130,918</td>
<td>7,007</td>
</tr>
</tbody>
</table>

1) 대학 : 일반·산업대학
2) 대학원 :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3) 전문·특수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합산임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010년도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에 따르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관련 전문대학원 신설 시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한 바 있다.

2011년부터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바 있다.

\(^{24}\) 이수연,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도 재정립, 『대교연 보고서』, 6호, 대학교육연구소, 2016.
증원을 확대 적용했다. 전체 대학원에 대해 학부정원을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이 허용된 것이다.

학부정원 감축 및 대학원정원 비율은 1.5명 대 1명 (전문대학원 정원 증원은 학부 정원 2명 대 대학원정원 1명)이며, 이때 학부와 대학원 정원의 상호조정 신청은 현재 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만 가능하고 정원조정 이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원조정 신청 대학은 최근 4년간 학부과정 평균 재학생 증원율이 95%이상 이거나, 최근 4년간 학부과정 입학정원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이어야 한다.  

다음이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 표3-3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정원 조정(안)

<table>
<thead>
<tr>
<th>현행 정원 조정 기준</th>
<th>개선(안)</th>
</tr>
</thead>
<tbody>
<tr>
<td>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td>
<td>상위권대학 학부 → 석사 : 1:1 비율조정 박사 ↔ 석사 : 1:2 상호조정허용</td>
</tr>
<tr>
<td>중위권대학</td>
<td>현행 유지</td>
</tr>
<tr>
<td>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하용(1:2)</td>
<td>하위권대학 학부 → 석사 2:1 비율 조정</td>
</tr>
</tbody>
</table>

※ 자료 :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안내, 2016.

평가 상위 대학은 학부 대 대학원 정원조정 비율을 1 : 1로 하고, 중위권 대학은 현행 유지, 하위권대는 현행 전문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처럼 학부 대 대학원 비율을

25)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및 [법보 1의6]
2:1로 한다는 것이다. (표3-3 참조)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의견수렴안”에도 양적조정 방안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대상 대학은 차등적 정원 감축을 실시하고, 자율 개선대학은 “대학원 정원 이동, 재정사업 연계 등 자율정원 감축 유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율개선대학 즉 평가 상위대학은 학부 정원 감축을 위해 대학원 확대를 쉽게 해주고, 평가 하위대학 즉 정원감축 대상 대학은 학부정원 감축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선에서 대학원정원을 증원하게 해 주었다.
대학원은 "돈 먹는 하마"

1) 학부보다 월등히 비싼 대학원 등록금

사회적으로 고급인력의 수요 증대와 대학원의 양적 팽창은 대학원 진학을 늘리고 있다. 더욱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진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대학원 진학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주요한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학부 등록금만 해도 사립대는 연간 740만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대학원 연간 등록금은 학부보다 절친 비싸기 때문이 다.

2017년 사립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51만원으로 학부보다 무려 311만원이 비싸다. 더 수준 높은 학술이론을 연구하고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등록금 이외에도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등을 생각하면 대학원이 "돈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학원 등록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2017년 사립 일반대학원 연간 등록금은 석사과정 1,051만원, 박사과정 1,045만원, 석 박사통합과정 1,202만원으로 모두 1,000만원을 넘는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가장 높아 석사 1,392만원, 박사 1,443만원, 석 박사통합 1,490만원에 달했다.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이 1,146~1,244만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자연과학계열(1,069~1,135만원), 인문사회 (878~897만원) 순이었다. 인문사회계열만이 유일하게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 〈표 4-1〉 2017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 만원)

<table>
<thead>
<tr>
<th>계열</th>
<th>학위</th>
<th>사립 일반</th>
<th>사립 전문</th>
<th>사립 특수</th>
<th>국공립 일반</th>
<th>국공립 전문</th>
<th>국공립 특수</th>
</tr>
</thead>
<tbody>
<tr>
<td>인문사회</td>
<td>석사</td>
<td>878</td>
<td>1,403</td>
<td>830</td>
<td>455</td>
<td>831</td>
<td>394</td>
</tr>
<tr>
<td></td>
<td>박사</td>
<td>884</td>
<td>980</td>
<td></td>
<td>452</td>
<td>660</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897</td>
<td>861</td>
<td></td>
<td>415</td>
<td></td>
<td></td>
</tr>
<tr>
<td>자연과학</td>
<td>석사</td>
<td>1,069</td>
<td>1,143</td>
<td>944</td>
<td>543</td>
<td>565</td>
<td>429</td>
</tr>
<tr>
<td></td>
<td>박사</td>
<td>1,107</td>
<td>860</td>
<td></td>
<td>612</td>
<td>654</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135</td>
<td>579</td>
<td></td>
<td>552</td>
<td>515</td>
<td></td>
</tr>
<tr>
<td>공학</td>
<td>석사</td>
<td>1,172</td>
<td>1,670</td>
<td>1,062</td>
<td>571</td>
<td>905</td>
<td>508</td>
</tr>
<tr>
<td></td>
<td>박사</td>
<td>1,205</td>
<td>1,108</td>
<td></td>
<td>641</td>
<td>697</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244</td>
<td>814</td>
<td></td>
<td>572</td>
<td></td>
<td></td>
</tr>
<tr>
<td>예체능</td>
<td>석사</td>
<td>1,154</td>
<td>1,203</td>
<td>977</td>
<td>626</td>
<td>475</td>
<td>461</td>
</tr>
<tr>
<td></td>
<td>박사</td>
<td>1,159</td>
<td>1,271</td>
<td></td>
<td>616</td>
<td>642</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146</td>
<td>1,087</td>
<td></td>
<td>548</td>
<td></td>
<td></td>
</tr>
<tr>
<td>의학</td>
<td>석사</td>
<td>1,392</td>
<td>2,057</td>
<td>1,370</td>
<td>792</td>
<td>1,179</td>
<td>576</td>
</tr>
<tr>
<td></td>
<td>박사</td>
<td>1,443</td>
<td>1,616</td>
<td></td>
<td>895</td>
<td>532</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490</td>
<td>1,990</td>
<td></td>
<td>666</td>
<td>1,298</td>
<td></td>
</tr>
<tr>
<td>평균</td>
<td>석사</td>
<td>1,051</td>
<td>1,468</td>
<td>870</td>
<td>544</td>
<td>869</td>
<td>421</td>
</tr>
<tr>
<td></td>
<td>박사</td>
<td>1,045</td>
<td>1,008</td>
<td></td>
<td>608</td>
<td>668</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202</td>
<td>774</td>
<td></td>
<td>550</td>
<td>1,186</td>
<td></td>
</tr>
</tbody>
</table>

1)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부설 대학원 제외)
2) 입학금 제외
3) 통합은 석·박사 통합 과정
4)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사립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은 일반대학원보다 비싸다. 2017년 사립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은 1,468만원으로 사립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보다 무려 417만원이나 비싸다. 다만 박사과정 연간 등록금은 1,008만원으로 사립 일반대학원보다
37만원이 적었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4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원이 많지 않고 종교 관련 대학원대학의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사립전문대학원 계열별 등록금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은 의학계열이 2,057만원으로 무려 2,000만원이 넘었다. 공학계열 1,670만원, 인문·사회계열 1,403만원, 예체능계열 1,203만원, 자연과학계열 1,143만원 순이었다. 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보다 소폭 높거나 낮게 나타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의학계열이 1,990만원으로 높았다.

사립 특수대학원은 2017년 연간 등록금이 870만원이지만, 의학계열이 1,370만원, 공학계열이 1,062만원으로 계열별 차이가 컸다.

국·공립 대학원은 사립 대학원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은 544만원으로 사립 일반대학원의 절반 수준(51.8%)이다. 박사과정은 608만원으로 사립의 58.1% 수준이었으며, 석·박사통합과정은 550만원으로 사립의 절반 이하(45.7%)였다. 국·공립 일반대학원 계열별 등록금 또한 대체로 사립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공립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2017년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이 831만원, 공학계열 석사과정 905만원, 의학계열 석사과정 1,179만원으로 사립 전문대학원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사립 일반대학원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국·공립 특수대학원 등록금은 421만원으로 학부 등록금(422만원) 수준이었으며, 계열별로도 사립 특수대학원의 절반에 이하였다.

2017년 대학원 계열별·과정별 연간 등록금 최고 대학은 살펴보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각각 1,051만원, 1,359만원으로 이화여대가 가장
비쳤으며,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은 성균관대가 각각 1,356만원, 1,379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729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table>
<thead>
<tr>
<th>계열</th>
<th>학위</th>
<th>일반</th>
<th>전문</th>
<th>특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학교명</td>
<td>등록금</td>
<td>학교명</td>
</tr>
<tr>
<td>인문사회</td>
<td>석사</td>
<td>이화여대</td>
<td>1,051</td>
<td>고려대</td>
</tr>
<tr>
<td></td>
<td>박사</td>
<td>서울신학대</td>
<td>1,129</td>
<td>영남대</td>
</tr>
<tr>
<td></td>
<td>통합</td>
<td>서울장신대</td>
<td>1,115</td>
<td>이화여대</td>
</tr>
<tr>
<td>자연과학</td>
<td>석사</td>
<td>성균관대</td>
<td>1,356</td>
<td>동국대</td>
</tr>
<tr>
<td></td>
<td>박사</td>
<td>가톨릭대</td>
<td>1,352</td>
<td>한양대</td>
</tr>
<tr>
<td></td>
<td>통합</td>
<td>가톨릭대</td>
<td>1,406</td>
<td>한양대</td>
</tr>
<tr>
<td>공학</td>
<td>석사</td>
<td>성균관대</td>
<td>1,379</td>
<td>서울대</td>
</tr>
<tr>
<td></td>
<td>박사</td>
<td>고려대</td>
<td>1,374</td>
<td>성균관대</td>
</tr>
<tr>
<td></td>
<td>통합</td>
<td>연세대</td>
<td>1,388</td>
<td>고려대</td>
</tr>
<tr>
<td>예체능</td>
<td>석사</td>
<td>이화여대</td>
<td>1,359</td>
<td>단국대</td>
</tr>
<tr>
<td></td>
<td>박사</td>
<td>서울신학대</td>
<td>1,369</td>
<td>건국대</td>
</tr>
<tr>
<td></td>
<td>통합</td>
<td>연세대</td>
<td>1,496</td>
<td>동덕여대</td>
</tr>
<tr>
<td>의학</td>
<td>석사</td>
<td>고려대</td>
<td>1,729</td>
<td>건국대</td>
</tr>
<tr>
<td></td>
<td>박사</td>
<td>고려대</td>
<td>1,729</td>
<td>경희대</td>
</tr>
<tr>
<td></td>
<td>통합</td>
<td>고려대</td>
<td>1,729</td>
<td>자의과학대</td>
</tr>
</tbody>
</table>

1)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 (대학원대학,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부설 대학원 제외)
2) 통합은 석, 박사 통합 과정
3)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4) 2017년 5월 30일자 집계자료 기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각각 1,129만원과 1,369만원인 서울신학대가 가장 비쌌으며, 자연과학계열은 가톨릭대가 1,3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은 각각 1,374만원, 1,729만원인 고려대가 가장 높았다.
일반대학원 석, 박사 통합과정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 순으로 각각 서울장신대(1,115만원), 가톨릭대(1,406만원), 연세대(1,388만원), 연세대(1,496만원), 고려대(1,729만원)가 가장 비쌌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 최고액은 건국대 의학계열로 무려 2,445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고려대 인문사회계열 2,204만원, 서울대 공학계열 1,661만원 순이었다. 국립대학교는 유일하게 계열별·과정별 연간 평균등록금 최고액을 보였다.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간 등록금 최고액은 성균관대 공학계열로 1,623만원이었으며, 경희대 의학계열 1,616만원, 영남대 인문사회계열 1,608만원 순이었다. 석, 박사 통합과정은 차의과대 의학계열이 1,990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고려대 공학계열 1,640만원, 한양대 자연과학계열 1,425만원 순이었다.

특수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1,213만원, 1,467만원인 연세대가 가장 비쌌으며, 자연과학계열은 성균관대(1,292만원)가, 예체능계열은 중앙대(1,320만원)가, 의학계열은 고려대(1,523만원)가 가장 비쌌다.

2) 대학원만 등록금 인상?!

2010년 이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변화 추이를 나타낸 〈표4-3〉과 〈표4-4〉를 보면, 국·공립 학부는 2010년 대비 2017년 22만원, 사립은 14만원이 인하된 반면, 대학원은 대부분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 2010년에서 2011년 인상된 수치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사
회적 관심이 적은 대학원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표4-3〉 2010~2017년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 만원)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대학(학부)</td>
<td>444</td>
<td>440</td>
<td>419</td>
<td>420</td>
<td>418</td>
<td>418</td>
<td>421</td>
<td>422</td>
<td>-22</td>
<td>-18</td>
</tr>
<tr>
<td>일반</td>
<td>석사</td>
<td>513</td>
<td>557</td>
<td>548</td>
<td>533</td>
<td>535</td>
<td>543</td>
<td>542</td>
<td>544</td>
<td>31</td>
</tr>
<tr>
<td></td>
<td>박사</td>
<td>519</td>
<td>576</td>
<td>585</td>
<td>597</td>
<td>601</td>
<td>608</td>
<td>608</td>
<td>89</td>
<td>31</td>
</tr>
<tr>
<td>통합</td>
<td>587</td>
<td>576</td>
<td>604</td>
<td>639</td>
<td>680</td>
<td>686</td>
<td>548</td>
<td>550</td>
<td>-37</td>
<td>-26</td>
</tr>
<tr>
<td>전문</td>
<td>석사</td>
<td>750</td>
<td>1,036</td>
<td>1,055</td>
<td>923</td>
<td>895</td>
<td>873</td>
<td>887</td>
<td>869</td>
<td>119</td>
</tr>
<tr>
<td></td>
<td>박사</td>
<td>667</td>
<td>682</td>
<td>711</td>
<td>690</td>
<td>662</td>
<td>652</td>
<td>663</td>
<td>668</td>
<td>1</td>
</tr>
<tr>
<td>통합</td>
<td>771</td>
<td>992</td>
<td>1,000</td>
<td>660</td>
<td>953</td>
<td>1,028</td>
<td>1,189</td>
<td>1,186</td>
<td>415</td>
<td>194</td>
</tr>
<tr>
<td>특수</td>
<td>석사</td>
<td>439</td>
<td>442</td>
<td>437</td>
<td>415</td>
<td>421</td>
<td>419</td>
<td>421</td>
<td>-18</td>
<td>-21</td>
</tr>
</tbody>
</table>

1) 대학(학부) : 일반대학 대상
2) 대학원 :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진학대학 대상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부설 대학원 제외)
3) 통합은 석·박사 통합 과정
4) 입학금 제외
5) 대학원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당 등록금 × 2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7

국·공립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010년 대비 2017년 31만원, 박사과정은 89만원 인상되었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19만원 인상되었고, 석·박사 통합과정은 무려 415만원이나 인상되었다. 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등록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2010년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이 대거 폐지되고 등록금이 높은 부산대학교 의학계 열 석·박사통합과정과 한경대 석·박사통합과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1만원 인상에 그쳤고, 특수대학원은 18만원 인하되었다.

2011년 이후로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원 등록금은 대부분 감소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은 2011년에 비해 13만원 감소했고,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4만원 감소했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67만원 감소했다.
### 표 4-4 2010-2017년 사립 대학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만원)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대학(학부)</td>
<td>754</td>
<td>769</td>
<td>739</td>
<td>736</td>
<td>734</td>
<td>734</td>
<td>737</td>
<td>740</td>
<td>-14</td>
</tr>
<tr>
<td>일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사</td>
<td>945</td>
<td>1,035</td>
<td>1,028</td>
<td>1,035</td>
<td>1,043</td>
<td>1,047</td>
<td>1,049</td>
<td>1,051</td>
<td>106</td>
</tr>
<tr>
<td>박사</td>
<td>970</td>
<td>1,036</td>
<td>1,037</td>
<td>1,042</td>
<td>1,044</td>
<td>1,041</td>
<td>1,041</td>
<td>1,045</td>
<td>76</td>
</tr>
<tr>
<td>통합</td>
<td>1,016</td>
<td>1,102</td>
<td>1,046</td>
<td>1,087</td>
<td>1,141</td>
<td>1,171</td>
<td>1,197</td>
<td>1,202</td>
<td>186</td>
</tr>
<tr>
<td>전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석사</td>
<td>1,072</td>
<td>1,361</td>
<td>1,380</td>
<td>1,446</td>
<td>1,478</td>
<td>1,510</td>
<td>1,541</td>
<td>1,468</td>
<td>396</td>
</tr>
<tr>
<td>박사</td>
<td>955</td>
<td>968</td>
<td>984</td>
<td>1,003</td>
<td>1,008</td>
<td>985</td>
<td>1,012</td>
<td>1,008</td>
<td>53</td>
</tr>
<tr>
<td>통합</td>
<td>1,044</td>
<td>1,025</td>
<td>1,005</td>
<td>842</td>
<td>803</td>
<td>780</td>
<td>783</td>
<td>774</td>
<td>-270</td>
</tr>
<tr>
<td>특수</td>
<td>796</td>
<td>834</td>
<td>840</td>
<td>838</td>
<td>851</td>
<td>857</td>
<td>865</td>
<td>870</td>
<td>74</td>
</tr>
</tbody>
</table>

1) 대학원 :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부설 대학원 제외)
2) 대학(학부) : 일반대학 대상
3) 통합은 석·박사 통합 과정
4) 입학금 제외
5) 대학원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사립 대학원도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학부는, 국·공립대보다는 적지만, 2010년 대비 2017년 14만원 인하되었으나,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106만원, 박사과정 76만원, 석·박사통합과정 186만원 인상되었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인상폭은 더욱 커 무려 396만원이나 인상되었으며, 박사과정은 53만원 인상되었다. 특수대학원 또한 국·공립은 인하된 반면 사립은 74만원 인상되었다.

사립대학원은 국·공립 대학원과 다르게 2011년 이후에도 등록금이 인상됐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16만원, 박사과정은 9만원, 석·박사통합과정은 100만원 인상되었고,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07만원, 박사과정은 41만원 늘어났다.

반면, 사립 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은 2011년 대비 2017년 251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의학계열 석·박사통합과정이 폐지되어 등록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입학금</th>
<th>수업료</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td>
<td>비율</td>
<td>금액</td>
</tr>
<tr>
<td>대학(학부)</td>
<td>261,409</td>
<td>77.2</td>
<td>8,109,406</td>
</tr>
<tr>
<td>대학원</td>
<td>77,175</td>
<td>22.8</td>
<td>1,700,106</td>
</tr>
<tr>
<td>소계</td>
<td>338,583</td>
<td>100.0</td>
<td>9,809,512</td>
</tr>
<tr>
<td>대학(학부)</td>
<td>261,615</td>
<td>77.7</td>
<td>8,355,152</td>
</tr>
<tr>
<td>대학원</td>
<td>75,169</td>
<td>22.3</td>
<td>1,734,277</td>
</tr>
<tr>
<td>소계</td>
<td>336,784</td>
<td>100.0</td>
<td>10,089,429</td>
</tr>
<tr>
<td>대학(학부)</td>
<td>247,796</td>
<td>76.7</td>
<td>8,087,590</td>
</tr>
<tr>
<td>대학원</td>
<td>75,394</td>
<td>23.3</td>
<td>1,788,498</td>
</tr>
<tr>
<td>소계</td>
<td>323,190</td>
<td>100.0</td>
<td>9,876,088</td>
</tr>
<tr>
<td>대학(학부)</td>
<td>242,778</td>
<td>75.9</td>
<td>8,085,693</td>
</tr>
<tr>
<td>대학원</td>
<td>76,978</td>
<td>24.1</td>
<td>1,817,342</td>
</tr>
<tr>
<td>소계</td>
<td>319,756</td>
<td>100.0</td>
<td>9,903,035</td>
</tr>
<tr>
<td>대학(학부)</td>
<td>238,888</td>
<td>75.9</td>
<td>8,022,596</td>
</tr>
<tr>
<td>대학원</td>
<td>75,919</td>
<td>24.1</td>
<td>1,827,127</td>
</tr>
<tr>
<td>소계</td>
<td>314,807</td>
<td>100.0</td>
<td>9,849,724</td>
</tr>
<tr>
<td>대학(학부)</td>
<td>238,592</td>
<td>76.2</td>
<td>7,917,673</td>
</tr>
<tr>
<td>대학원</td>
<td>74,717</td>
<td>23.8</td>
<td>1,827,206</td>
</tr>
<tr>
<td>소계</td>
<td>313,310</td>
<td>100.0</td>
<td>9,744,879</td>
</tr>
</tbody>
</table>

1)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2)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없는 대학 제외
3) 등록금소득 : 기타입학금 및 기타수업료 제외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대학 등록금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렸다. 〈표4-5〉에 따르면, 2010년 사립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에서 차지하는 대학원 등록금 비중은 17.5%였다. 2011년 학부, 대학원 등록금 모두 인상한 결과 대학원 등록금 비중은 17.4%로 소폭 하락했다. 이후
대학원 등록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18.2%, 2014년 18.5%, 2016년 18.9%로 1.5%p 증가했다.

고액 등록금으로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정부 차원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은 적정규모 사립대 학부 등록금의 인하를 이끌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의 동결·인하로 생기는 부족분을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메우고 있다.

3) 대학원도 세계 최고 수준 등록금

지난 9월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의 경우 "'16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로 '14학년도 대비 $195, 사립대학(독립형)은 $8,205로 $349 감소하여,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모두 등록금이 감소했다"며, 등록금 순위가 국·공립대학은 3단계(3위 → 6위), 사립대학(독립형) 2단계(2위 → 4위)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와 마찬가지로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은 2015/2016학년도 기준 $11,040로 미국 철레에 이어 세 번째였으며, 국립 대학원 석사과정은 $6,024로 미국, 철레, 호주에 이어 4위 였다.

순위보다 더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 대다수가 등록금이 월등히 비싼 사립에 재학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각각 67%, 94%로, 81%가 사립에 다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표 4-6 OECD 가입국 중 연간 평균 등록금 추정치 상위 국가 현황

(단위 : 미국달러 PPP 환산액)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등록 학생 비율</th>
<th>학사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계</th>
<th>석사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국공립</td>
<td>사립</td>
<td>국공립</td>
</tr>
<tr>
<td></td>
<td>정부의존형</td>
<td>독립형</td>
<td></td>
</tr>
<tr>
<td>미국</td>
<td>67</td>
<td>a</td>
<td>33</td>
</tr>
<tr>
<td>일본</td>
<td>26</td>
<td>a</td>
<td>74</td>
</tr>
<tr>
<td>철레</td>
<td>15</td>
<td>12</td>
<td>72</td>
</tr>
<tr>
<td>캐나다</td>
<td>m</td>
<td>m</td>
<td>m</td>
</tr>
<tr>
<td>한국</td>
<td>19</td>
<td>a</td>
<td>81</td>
</tr>
<tr>
<td>호주</td>
<td>94</td>
<td>2</td>
<td>4</td>
</tr>
</tbody>
</table>

1) 2015/2016학년도 기준
2) a :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없음
3) m :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
4) 한국의 등록 학생 비율은 교육지표 수치임

4)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

대학원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입학금 또한 결코 적지 않다. 2017년 사립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90만원을 넘었다. 계열별로는 최저 89만원에서 최대 101만원에 달했다. 사립 전문대학원 입학금은 과정별 편차가 큰 편이었으며, 석사과정 평균 입학금은 94만원이었다. 사립 특수대학원 평균 입학금은 87만원으로 일반·전문대학원 보다 4~7만원 적었지만, 의학계열은 113만원에 달해 사립 대학원 입학금 중 가장 비쌌다.

그나마 국·공립 대학원 입학금은 사립 대학원의 1/5 수준이다.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석·박사통합과정(22만원)과 예체능계열 석·박사통합과정(28만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전문·특수대학원 계열별 과정별 입학금이 모두 20만원을 넘지 않았다.
대학 입학금은 정수목적과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제각각이며 금액 또한 과도한 경우가 많아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액 등록금과 더불어 입학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입학금 폐지를 공약화 했고, 정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공립대학은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는 정부의 입학금 인하 기조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지난 9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입학금 감축·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는 대학까지 합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이 학부 중심으로 짜여있어 대학원 등록금 고액화가 여전한데도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도 못 받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대학원 입학금 폐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6) 고유선.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전형료. 인하 결의. 『연합뉴스』. 2017.8.17.
27) 최민지.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환영". 『머니투데이』. 2017.9.10.
<table>
<thead>
<tr>
<th>계열</th>
<th>학위</th>
<th>사립 일반</th>
<th>사립 전문</th>
<th>사립 특수</th>
<th>국공립 일반</th>
<th>국공립 전문</th>
<th>국공립 특수</th>
</tr>
</thead>
<tbody>
<tr>
<td>인문사회</td>
<td>석사</td>
<td>91</td>
<td>95</td>
<td>86</td>
<td>18</td>
<td>19</td>
<td>18</td>
</tr>
<tr>
<td></td>
<td>박사</td>
<td>89</td>
<td>87</td>
<td>-</td>
<td>18</td>
<td>20</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93</td>
<td>78</td>
<td>-</td>
<td>22</td>
<td>-</td>
<td>-</td>
</tr>
<tr>
<td>자연과학</td>
<td>석사</td>
<td>90</td>
<td>66</td>
<td>86</td>
<td>18</td>
<td>19</td>
<td>16</td>
</tr>
<tr>
<td></td>
<td>박사</td>
<td>91</td>
<td>46</td>
<td>-</td>
<td>18</td>
<td>19</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00</td>
<td>27</td>
<td>-</td>
<td>20</td>
<td>0</td>
<td>-</td>
</tr>
<tr>
<td>공학</td>
<td>석사</td>
<td>93</td>
<td>95</td>
<td>89</td>
<td>17</td>
<td>12</td>
<td>17</td>
</tr>
<tr>
<td></td>
<td>박사</td>
<td>95</td>
<td>78</td>
<td>-</td>
<td>17</td>
<td>10</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101</td>
<td>55</td>
<td>-</td>
<td>20</td>
<td>-</td>
<td>-</td>
</tr>
<tr>
<td>예체능</td>
<td>석사</td>
<td>91</td>
<td>93</td>
<td>87</td>
<td>18</td>
<td>21</td>
<td>17</td>
</tr>
<tr>
<td></td>
<td>박사</td>
<td>91</td>
<td>99</td>
<td>-</td>
<td>18</td>
<td>10</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93</td>
<td>81</td>
<td>-</td>
<td>28</td>
<td>-</td>
<td>-</td>
</tr>
<tr>
<td>의학</td>
<td>석사</td>
<td>89</td>
<td>97</td>
<td>113</td>
<td>18</td>
<td>18</td>
<td>19</td>
</tr>
<tr>
<td></td>
<td>박사</td>
<td>91</td>
<td>99</td>
<td>-</td>
<td>18</td>
<td>18</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95</td>
<td>98</td>
<td>-</td>
<td>18</td>
<td>18</td>
<td>-</td>
</tr>
<tr>
<td>평균</td>
<td>석사</td>
<td>91</td>
<td>94</td>
<td>87</td>
<td>18</td>
<td>19</td>
<td>17</td>
</tr>
<tr>
<td></td>
<td>박사</td>
<td>91</td>
<td>85</td>
<td>-</td>
<td>18</td>
<td>15</td>
<td>-</td>
</tr>
<tr>
<td></td>
<td>통합</td>
<td>99</td>
<td>57</td>
<td>-</td>
<td>20</td>
<td>18</td>
<td>-</td>
</tr>
</tbody>
</table>

1)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부설 대학원 제외)
2) 통합은 석·박사 통합 과정
3) 대학원 연간 등록금 = 평균 학기 당 등록금 × 2
대학원생 학비부담은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위 논문심사를 위한 논문심사료와 수업연한 내에 논문 통과를 못한 학생은 논문제출을 위해 별도의 등록비(연구등록비)를 부담해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라는 기준으로 대학마다 논문심사료는 천차만별이다.

〈표5-1〉의 2017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살펴보면, 자료를 제출한 101교 일반대학원 중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대학원이 49곳(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대학원(16개, 15.8%), ‘10만원 미만’ 대학원(14개, 13.9%) 순이었다. 그러나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원(동서대)이 있는가 하면, ‘30만원 이상’ 대학원도 9개(8.9%)나 있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없음</th>
<th>10만원 미만</th>
<th>10만~15만원 미만</th>
<th>15만~20만원 미만</th>
<th>20만~25만원 미만</th>
<th>25만~30만원 미만</th>
<th>30만원 이상</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수</td>
<td>1</td>
<td>14</td>
<td>49</td>
<td>16</td>
<td>9</td>
<td>3</td>
<td>9</td>
<td>101</td>
</tr>
<tr>
<td>비율</td>
<td>1.0</td>
<td>13.9</td>
<td>48.5</td>
<td>15.8</td>
<td>8.9</td>
<td>3.0</td>
<td>8.9</td>
<td>100.0</td>
</tr>
</tbody>
</table>

1) 석사과정 설치 일반대학원 101개 대상
2) 학과별 또는 계열별 논문심사료가 다를 경우 비율이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출
이들 '30만원 이상' 대학원은 대다수 종교대학으로, 침례신학대와 한일장신대(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이 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호남신학대 일반대학원이 42만원이었다. 대전가톨릭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우석대, KC대, 한중대 일반대학원은 30만원 이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훨씬 비싸다. 〈표5-2〉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95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2017년 1학기 기준 논문심사료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개(37.9%)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 34개(35.8%)로 그 다음이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무려 100만원이 넘는 대학원도 9개(9.5%)에 달한 반면, 30만원 미만 대학원은 8개(8.4%)였다. 박사과정 또한 논문심사료가 없는 대학원(동서대)도 있었다.

〈표5-2〉 2017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 현황 (1학기 기준)
(단위 : 개,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없음</th>
<th>30만원 미만</th>
<th>30만원~50만원 미만</th>
<th>50만원~70만원 미만</th>
<th>70만원~100만원 미만</th>
<th>100만원 이상</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수</td>
<td>1</td>
<td>8</td>
<td>36</td>
<td>34</td>
<td>7</td>
<td>9</td>
<td>95</td>
</tr>
<tr>
<td>비율</td>
<td>1.1</td>
<td>8.4</td>
<td>37.9</td>
<td>35.8</td>
<td>7.4</td>
<td>9.5</td>
<td>100.0</td>
</tr>
</tbody>
</table>

1) 박사과정 선효 일반대학원 95개 대상
2) 학과별 또는 계열별 논문심사료가 다를 경우 비용을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출

박사과정 논문심사료가 '100만원 이상'인 대학원을 살펴보면, 침례신학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18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음으로 호남신학대 일반대학원 160만원, 한일장신대(신학과) 150만원, 호서대 120만원이었다. 나머지 경기대, 남부대, 서울기독대, 수원가톨릭대, KC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100만원이었다. 박사과정 역시 종

29) 한일장신대 일반대학원 중 석사과정은 신학과만 50만원 나머지 학과(기독교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는 27만원, 박사과정 또한 신학과만 150만원이며, 나머지 학과의 박사과정은 45만원이었다.
교대학이 다수였다.

2015년에 비해 2017년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일반대학원도 있었다. 〈표5-3〉은 2015년 대비 2017년 논문심사료 변동 일반대학원 현황을 나타낸 표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대학원은 10곳,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대학원은 16곳이었다.

〈표5-3〉 2015년 VS 2017년 논문심사료 인상·인하 일반대학원 현황

(단위: 만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석사</th>
<th>박사</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15년</td>
<td>2017년</td>
</tr>
<tr>
<td>가천대</td>
<td>15</td>
<td>15</td>
</tr>
<tr>
<td>건양대</td>
<td>22</td>
<td>15</td>
</tr>
<tr>
<td>경기대</td>
<td>10</td>
<td>15</td>
</tr>
<tr>
<td>광운대</td>
<td>8.4</td>
<td>10</td>
</tr>
<tr>
<td>배재대</td>
<td>9.9</td>
<td>15</td>
</tr>
<tr>
<td>부산외국어대</td>
<td>9</td>
<td>12</td>
</tr>
<tr>
<td>삼육대</td>
<td>15</td>
<td>25</td>
</tr>
<tr>
<td>서울기독대</td>
<td>20</td>
<td>30</td>
</tr>
<tr>
<td>서울여대</td>
<td>9</td>
<td>9</td>
</tr>
<tr>
<td>우석대</td>
<td>14</td>
<td>30</td>
</tr>
<tr>
<td>우송대</td>
<td>9</td>
<td>9</td>
</tr>
<tr>
<td>인천대</td>
<td>25</td>
<td>25</td>
</tr>
<tr>
<td>칠레신학대</td>
<td>50</td>
<td>50</td>
</tr>
<tr>
<td>평택대</td>
<td>15</td>
<td>20</td>
</tr>
<tr>
<td>한국기술교육대</td>
<td>10</td>
<td>10</td>
</tr>
<tr>
<td>한국해양대</td>
<td>10</td>
<td>20</td>
</tr>
<tr>
<td>한성대</td>
<td>24</td>
<td>18</td>
</tr>
<tr>
<td>호서대</td>
<td>15</td>
<td>21</td>
</tr>
</tbody>
</table>

1) 논문심사료 자료 계산 대학원 101개 대상
2) 각 연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가장 많이 인상한 대학원은 우석대 일반대학원으로 2015년 대비 2017년 16만원을 인상했으며, 삼육대, 서울기독대, 한국해양대 일반대학원이 10만원을 인상해 그 다음이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가장 많이 인상한 대학은 호서대 일반대학원으로 무려 70만원이나 인상했으며, 경기대 50만원, 서울기독대 46만원, 침례신학대 40만원, 한성대 36만원, 한국해양대 30만원 순이었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대신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일반대학원이 8곳이었고, 반대로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일반대학원은 2곳이었다.

학생 사비로 부담하던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거마비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자 논문심사료를 인상한 것으로 추측된다.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 부담임에도 이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사료 인상을 한 것이다.

대학원생들이 학위취득을 위해 부담하는 것은 논문심사료 뿐만이 아니다. 논문심사료 이외에 논문지도비나, 졸업자격을 얻기 위한 영어능력시험(토익등)을 포함한 각종시험료 등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논문심사를 제때에 마치지 못하면, 논문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가 바로 연구등록비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제정되었고,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음.
규정하고 있고, 그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심사료와 마찬가지로 연구등록비를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절반, 1/5 등 천차만별이다. 〈표5-4〉에 따르면, 2017년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

〈표5-4〉 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1학기 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유</th>
<th>무</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원 수</td>
<td>62</td>
<td>27</td>
<td>89</td>
</tr>
<tr>
<td>비율</td>
<td>69.7</td>
<td>30.3</td>
<td>100.0</td>
</tr>
</tbody>
</table>

1) 국립대(대학원),공립,사립 일반대학원 89개
2) 2017년 1학기 기준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과라도 연구등록비가 있으며 포함

〈표5-5〉 2017년 일반대학원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 종류별 현황 (1학기 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학원 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금액 별도 규정</td>
<td>15</td>
<td>24.2</td>
</tr>
<tr>
<td>등록금의 일정 비율</td>
<td></td>
<td></td>
</tr>
<tr>
<td>1%이상, 10%미만</td>
<td>7</td>
<td>11.3</td>
</tr>
<tr>
<td>10%이상, 20%미만</td>
<td>25</td>
<td>40.3</td>
</tr>
<tr>
<td>20%이상, 30%미만</td>
<td>6</td>
<td>9.7</td>
</tr>
<tr>
<td>30%이상</td>
<td>1</td>
<td>1.6</td>
</tr>
<tr>
<td>소계</td>
<td>39</td>
<td>62.9</td>
</tr>
<tr>
<td>기타</td>
<td>7</td>
<td>11.3</td>
</tr>
<tr>
<td>파악 불가</td>
<td>1</td>
<td>1.6</td>
</tr>
<tr>
<td>합계</td>
<td>62</td>
<td>100.0</td>
</tr>
</tbody>
</table>

1) 연구등록비를 받는 국립대(대학원),공립,사립 일반대학원 62개
2)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책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 중 석사, 박사과정의 책정 비율이 다를 경우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함
3) 기타는 금액 별도 규정(석사과정)과 등록금의 일정비율(박사) 모두 적용하는 대학원 2곳, 수업료 또는 수업료 (Ⅱ)의 10% 기재 2곳,  "구"가설병의 10% 기재 1곳, "기본수업료의 1/3" 기재 1곳, "신입생 입학금" 기재 1곳.
4) 파악 불가는 연구등록금 납부규정은 있으나, 금액 미기재 대학원
료를 제출한 89개 일반대학원 중 62개의 대학원에서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다(1학기 기준) 10개의 일반대학원 중 7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62개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별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대학원이 39곳(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은 15곳(24.2%)이었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보니 2017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수원가톨릭대)에서 최대 122만 6천원(광운대), 박사과정은 최소 6만 6천원(목원대)에서 126만 6천원(광운대)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목포해양대는 국립대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등록금의 50%를 연구등록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사립 일반대학원의 2017년 학기당 등록금이 50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등록금의 20%이상을 징수하는 사립 일반대학원은 연구등록비로 학기당 100만원 이상 내야한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액, 논문심사료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감안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소한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구등록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며, 논문심사료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부하다보니 빚더미?!  

1) 이상한 나라의 장학금

대학원 등록금과 기타 납부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과연 장학금은 충분할까? 2016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사립 일반대학원 574만원, 전문대학원 426만원, 특수대학원 219만원이다. 국·공립 대학원의 장학금은 일반대학원 353만원, 전문대학원 232만원, 특수대학원 52만원이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2년</th>
<th>2013년</th>
<th>2014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증감 (*16-14)</th>
</tr>
</thead>
<tbody>
<tr>
<td>사립</td>
<td>일반</td>
<td>540</td>
<td>503</td>
<td>554</td>
<td>561</td>
<td>574</td>
</tr>
<tr>
<td></td>
<td>전문</td>
<td>403</td>
<td>430</td>
<td>438</td>
<td>435</td>
<td>426</td>
</tr>
<tr>
<td></td>
<td>특수</td>
<td>198</td>
<td>207</td>
<td>209</td>
<td>213</td>
<td>219</td>
</tr>
<tr>
<td>국공립</td>
<td>일반</td>
<td>323</td>
<td>263</td>
<td>334</td>
<td>346</td>
<td>353</td>
</tr>
<tr>
<td></td>
<td>전문</td>
<td>209</td>
<td>236</td>
<td>214</td>
<td>220</td>
<td>232</td>
</tr>
<tr>
<td></td>
<td>특수</td>
<td>50</td>
<td>55</td>
<td>52</td>
<td>53</td>
<td>52</td>
</tr>
</tbody>
</table>

※ 자료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장학금 수혜 현황, 각 연도.

2012년 대비 2016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공립 및 사립 모두 늘어났다. 일반대학원 증가액이 가장 컸고, 사립 34만원, 국·공립 30만원이었다. 전문대학원은 사립 24만원, 국·공립 23만원 증가했으며, 특수대학원은 사립 21만원, 국·공립 2만원 늘었다.
2016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이 국·공립 542만원, 사립 1,049만원임을 감안하면(표 4-3, 표 4-4 참조), 모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등록금의 절반 이 상이다. 그러나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대학원의 장학금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반대학원 장학금은 대학원별 편중이 심각하다. 표 6-2를 보면, 사립 일반대학원 91곳(62.3%)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평균 금액(574만원)보다도 적은 5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43곳(29.5%)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300만원 이하였다.

국·공립 일반대학원은 사립 일반대학원보다 편중이 더 심하다. 국·공립 일반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평균인 353만원에 못 미치는 300만 원 미만 대학원은 24개로 전체 국·공립 일반대학원의 75%나 차지한다. 국·공립 일반대학원의 절반(16개, 50.0%)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 표 6-2 2016년 일반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300만원 미만</th>
<th>300만~500만원 미만</th>
<th>500만~700만원 미만</th>
<th>700만~900만원 미만</th>
<th>900만원 이상</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사립</td>
<td>대학원수</td>
<td>43</td>
<td>48</td>
<td>37</td>
<td>15</td>
<td>3</td>
</tr>
<tr>
<td></td>
<td>비율</td>
<td>29.5</td>
<td>32.9</td>
<td>25.3</td>
<td>10.3</td>
<td>2.1</td>
</tr>
<tr>
<td>국·공립</td>
<td>대학원수</td>
<td>2</td>
<td>14</td>
<td>8</td>
<td>6</td>
<td>2</td>
</tr>
<tr>
<td></td>
<td>비율</td>
<td>6.3</td>
<td>43.8</td>
<td>25.0</td>
<td>18.8</td>
<td>6.3</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등록금 없는 대학원 제외

장학금을 내역별로 살펴본 표 6-3과 표 6-4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근로장학금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2016년 사립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10.4%이며, 특수대학원은 7.5%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24.1%에 달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에 경제적 및 심사기준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6-3〉 2016년 사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별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성적우수</th>
<th>저소득층</th>
<th>근로</th>
<th>교직원</th>
<th>기타</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금액</td>
<td>7,824,044</td>
<td>3,780,792</td>
<td>8,079,879</td>
<td>458,705</td>
<td>16,159,690</td>
</tr>
<tr>
<td></td>
<td>비율</td>
<td>21.6</td>
<td>10.4</td>
<td>22.3</td>
<td>1.3</td>
<td>44.5</td>
</tr>
<tr>
<td>전문</td>
<td>금액</td>
<td>2,988,744</td>
<td>1,856,473</td>
<td>595,255</td>
<td>95,285</td>
<td>2,167,004</td>
</tr>
<tr>
<td></td>
<td>비율</td>
<td>38.8</td>
<td>24.1</td>
<td>7.7</td>
<td>1.2</td>
<td>28.1</td>
</tr>
<tr>
<td>특수</td>
<td>금액</td>
<td>1,749,723</td>
<td>1,126,979</td>
<td>1,532,770</td>
<td>750,057</td>
<td>9,944,116</td>
</tr>
<tr>
<td></td>
<td>비율</td>
<td>11.6</td>
<td>7.5</td>
<td>10.1</td>
<td>5.0</td>
<td>65.8</td>
</tr>
<tr>
<td>합계</td>
<td>금액</td>
<td>12,562,511</td>
<td>6,764,243</td>
<td>10,207,904</td>
<td>1,304,047</td>
<td>28,270,810</td>
</tr>
<tr>
<td></td>
<td>비율</td>
<td>21.3</td>
<td>11.4</td>
<td>17.3</td>
<td>2.2</td>
<td>47.8</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국·공립 일반대학원의 저소득층 지급 비중도 낮아 8.0%이며, 특수대학원도 6.9%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문대학원이 29.1%로 높은데, 이는 사립 전문대학원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총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표 6-4 2016년 국·공립 대학원 교내장학금 종류별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성적우수</th>
<th>저소득층</th>
<th>근로</th>
<th>교직원</th>
<th>기타</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금액</td>
<td>3,485,310</td>
<td>522,555</td>
<td>1,739,296</td>
<td>0</td>
<td>6,559,313</td>
</tr>
<tr>
<td></td>
<td>비율</td>
<td>53.1</td>
<td>8.0</td>
<td>26.5</td>
<td>0.0</td>
<td>12.4</td>
</tr>
<tr>
<td>전문</td>
<td>금액</td>
<td>1,041,391</td>
<td>555,314</td>
<td>153,626</td>
<td>0</td>
<td>1,911,136</td>
</tr>
<tr>
<td></td>
<td>비율</td>
<td>54.5</td>
<td>29.1</td>
<td>8.0</td>
<td>0.0</td>
<td>12.4</td>
</tr>
<tr>
<td>특수</td>
<td>금액</td>
<td>733,714</td>
<td>76,662</td>
<td>81,630</td>
<td>1,823</td>
<td>1,110,319</td>
</tr>
<tr>
<td></td>
<td>비율</td>
<td>66.1</td>
<td>6.9</td>
<td>7.4</td>
<td>0.2</td>
<td>19.5</td>
</tr>
<tr>
<td>합계</td>
<td>금액</td>
<td>5,260,415</td>
<td>1,154,531</td>
<td>1,974,552</td>
<td>1,823</td>
<td>9,580,768</td>
</tr>
<tr>
<td></td>
<td>비율</td>
<td>54.9</td>
<td>12.1</td>
<td>20.6</td>
<td>0.0</td>
<td>12.4</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학비감면 비율만 봤을 때, 학부보다 대학원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공립대 학부 학비감면 비율은 13.8%였으나 대학원은 16.7%였으며, 사립대학 또한 학부 14.8%, 대학원 27.8%에 달했다. 그러나 대학원 등록금이 더 비싸, 학비 부담은 크다.

경제곤란자 감면비율은 반대였다. 2014년 경제곤란자 감면비율은 국·공립 학부 47.7%, 대학원 12.3%이며, 사립 학부 49.1%, 대학원 16.3%였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지침 변경으로 2014년 이후 수치를 알 수 없어 최근 연도의 비율은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2013년과 2014년 수치만을 보더라도 대학원이 경제곤란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국·공립 대학원은 또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모두 교내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은 등록금을 마련을 위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비중 보다는 성적우수장학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한편, 일반대학원의 근로장학금 비중이 사립 22.3%, 국·공립 26.5%다.31) 근로장학금 비중이 높은 것은,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근로장학금으로 지급한 때문인 다.32)

〈표 6-5〉 2012~2015년 대학 학비감면 현황

(단위 :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학부</th>
<th>대학원</th>
<th>학부+대학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학비감면 비율</td>
<td>경제곤란자 감면비율</td>
<td>학비감면 비율</td>
</tr>
<tr>
<td>2012년</td>
<td>국공립</td>
<td>13.9</td>
<td>15.0</td>
</tr>
<tr>
<td></td>
<td>사립</td>
<td>14.2</td>
<td>27.6</td>
</tr>
<tr>
<td>2013년</td>
<td>국공립</td>
<td>14.2</td>
<td>49.8</td>
</tr>
<tr>
<td></td>
<td>사립</td>
<td>14.4</td>
<td>48.1</td>
</tr>
<tr>
<td>2014년</td>
<td>국공립</td>
<td>13.9</td>
<td>47.7</td>
</tr>
<tr>
<td></td>
<td>사립</td>
<td>14.8</td>
<td>49.1</td>
</tr>
<tr>
<td>2015년</td>
<td>국공립</td>
<td>13.8</td>
<td>16.7</td>
</tr>
<tr>
<td></td>
<td>사립</td>
<td>14.8</td>
<td>27.8</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대상(대학원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제외)
※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대학알리미 대학별 공시자료), 2017.

2) 학자금 대출은 필수?!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장학금은

31) 물론 사립 일반대학원은 기타장학금 비중이 43.4%로 가장 높지만, 구체적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지도교수 등의 연구과제 참여로 받는 인건비 등의 장학금으로 파악됨.
32) 2017년 대한원 총학생회연합회가 주요 대학 34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 1교 뿐 이었음. 규모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김병덕. 임금 대신 장학금, 4대보험도 없어 … 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적용용.『파이낸셜뉴스』, 2017.2.9.
충분치 않고, 정부의 국가장학금 혜택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해, 일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표6-6〉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을 받은 사립 대학원생은 무려 3만 7,149명에 달하고, 대출 총액은 1,917억원이 넘는다.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 금액은 516만원이었다.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19.5%로 사립 대학원생 5명 중 1명은 학자금대출을 받는 셈이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재학생</th>
<th>전체(등록금+생활비)</th>
<th>등록금(학비)</th>
<th>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원</td>
<td>금액 (백만원)</td>
<td>인원</td>
<td>금액 (백만원)</td>
</tr>
<tr>
<td>2012년</td>
<td>1학기</td>
<td>192,194</td>
<td>31,288</td>
<td>161,258</td>
</tr>
<tr>
<td></td>
<td>2학기</td>
<td>178,648</td>
<td>29,135</td>
<td>144,337</td>
</tr>
<tr>
<td>2013년</td>
<td>1학기</td>
<td>190,247</td>
<td>34,015</td>
<td>175,648</td>
</tr>
<tr>
<td></td>
<td>2학기</td>
<td>177,698</td>
<td>31,496</td>
<td>156,935</td>
</tr>
<tr>
<td>2014년</td>
<td>1학기</td>
<td>189,827</td>
<td>37,750</td>
<td>195,440</td>
</tr>
<tr>
<td></td>
<td>2학기</td>
<td>178,788</td>
<td>36,231</td>
<td>182,547</td>
</tr>
<tr>
<td>2015년</td>
<td>1학기</td>
<td>190,642</td>
<td>38,170</td>
<td>198,083</td>
</tr>
<tr>
<td></td>
<td>2학기</td>
<td>179,475</td>
<td>35,485</td>
<td>178,965</td>
</tr>
<tr>
<td>2016년</td>
<td>1학기</td>
<td>190,207</td>
<td>37,149</td>
<td>191,749</td>
</tr>
<tr>
<td></td>
<td>2학기</td>
<td>178,752</td>
<td>34,778</td>
<td>174,408</td>
</tr>
<tr>
<td>증감</td>
<td>1학기</td>
<td>-1,987</td>
<td>5,861</td>
<td>30,490</td>
</tr>
<tr>
<td></td>
<td>2학기</td>
<td>104</td>
<td>5,643</td>
<td>29,871</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일반·전문·특수대학원 합산 기준

2016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인원은 2012년 1학기에 비해, 5,861명, 금액은 305억원
가량 늘어났다.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 또한 3.3%p 늘었다.

2016년 1학기 국·공립 대학원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인원은 9,771명이며, 대출받은 금액은 약 3,434억원이다.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 금액은 351만원이었으며,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11.7%였다. 사립대학에 비해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 금액과 이용 학생 비율이 낮았다. 이는 대학원 등록금이 사립 대학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7 2012~2016년 국·공립 대학원 학자금대출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재학생</th>
<th>전체(등록금+생활비)</th>
<th>등록금(학비)</th>
<th>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원</td>
<td>금액</td>
<td>1인당</td>
<td>금액</td>
</tr>
<tr>
<td>2012년</td>
<td>1학기</td>
<td>86,148</td>
<td>8,047</td>
<td>29,280</td>
</tr>
<tr>
<td></td>
<td>2학기</td>
<td>75,467</td>
<td>8,047</td>
<td>29,601</td>
</tr>
<tr>
<td>2013년</td>
<td>1학기</td>
<td>83,879</td>
<td>9,646</td>
<td>35,304</td>
</tr>
<tr>
<td></td>
<td>2학기</td>
<td>75,979</td>
<td>9,272</td>
<td>34,195</td>
</tr>
<tr>
<td>2014년</td>
<td>1학기</td>
<td>84,156</td>
<td>10,418</td>
<td>37,334</td>
</tr>
<tr>
<td></td>
<td>2학기</td>
<td>76,842</td>
<td>9,970</td>
<td>36,668</td>
</tr>
<tr>
<td>2015년</td>
<td>1학기</td>
<td>84,648</td>
<td>10,392</td>
<td>37,008</td>
</tr>
<tr>
<td></td>
<td>2학기</td>
<td>76,938</td>
<td>9,671</td>
<td>34,523</td>
</tr>
<tr>
<td>2016년</td>
<td>1학기</td>
<td>83,756</td>
<td>9,771</td>
<td>34,282</td>
</tr>
<tr>
<td></td>
<td>2학기</td>
<td>76,481</td>
<td>9,256</td>
<td>32,472</td>
</tr>
<tr>
<td>증감</td>
<td>1학기</td>
<td>-2,392</td>
<td>1,724</td>
<td>5,002</td>
</tr>
<tr>
<td></td>
<td>2학기</td>
<td>1,014</td>
<td>1,209</td>
<td>2,871</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일반 전문·특수대학원 합산 기준

국·공립 대학원도, 2012년 1학기에 비해, 2016년 1학기 대출 인원은 1,724명, 금액
은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 또한 2.3%p 증가한 수지다. 다만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 금액은 13만원 낮아졌다.

〈표6-8〉 2012~2016년 대학원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등록금+생활비)</th>
<th>등록금</th>
<th>생활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원</td>
<td>잔액</td>
<td>1인당</td>
</tr>
<tr>
<td>사립</td>
<td></td>
<td></td>
<td></td>
</tr>
<tr>
<td>2012년</td>
<td>71,515</td>
<td>729,878</td>
<td>10.21</td>
</tr>
<tr>
<td>2013년</td>
<td>84,905</td>
<td>896,286</td>
<td>10.56</td>
</tr>
<tr>
<td>2014년</td>
<td>97,285</td>
<td>1,051,796</td>
<td>10.81</td>
</tr>
<tr>
<td>2015년</td>
<td>106,677</td>
<td>1,190,856</td>
<td>11.16</td>
</tr>
<tr>
<td>2016년</td>
<td>114,607</td>
<td>1,302,495</td>
<td>11.36</td>
</tr>
<tr>
<td>증감</td>
<td>43,092</td>
<td>572,617</td>
<td>1.16</td>
</tr>
<tr>
<td>공과</td>
<td></td>
<td></td>
<td></td>
</tr>
<tr>
<td>2012년</td>
<td>18,260</td>
<td>147,445</td>
<td>8.07</td>
</tr>
<tr>
<td>2013년</td>
<td>22,034</td>
<td>184,153</td>
<td>8.36</td>
</tr>
<tr>
<td>2014년</td>
<td>24,956</td>
<td>214,837</td>
<td>8.61</td>
</tr>
<tr>
<td>2015년</td>
<td>27,556</td>
<td>241,740</td>
<td>8.61</td>
</tr>
<tr>
<td>2016년</td>
<td>28,897</td>
<td>258,201</td>
<td>8.94</td>
</tr>
<tr>
<td>증감</td>
<td>10,637</td>
<td>110,756</td>
<td>0.86</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r>
<tr>
<td>2012년</td>
<td>89,775</td>
<td>877,323</td>
<td>9.77</td>
</tr>
<tr>
<td>2013년</td>
<td>106,939</td>
<td>1,080,439</td>
<td>10.10</td>
</tr>
<tr>
<td>2014년</td>
<td>122,241</td>
<td>1,266,633</td>
<td>10.36</td>
</tr>
<tr>
<td>2015년</td>
<td>134,233</td>
<td>1,432,596</td>
<td>10.67</td>
</tr>
<tr>
<td>2016년</td>
<td>143,504</td>
<td>1,560,696</td>
<td>10.88</td>
</tr>
<tr>
<td>증감</td>
<td>53,729</td>
<td>683,373</td>
<td>1.10</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일반·전문·특수대학원 합산 기준
3) 부실채권 전환대출 제외
4) 각 연도 연말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17

매학기 계속된 학자금대출로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2016년 12월 말,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은 14만 3,504명에 달하고, 대출 액은 1조 5,607억원에 이르며, 1인당 대출금액은 1,088만원이었다.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대부분은 사립 대학원생의 몫이었다.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11만 4,607명이었고, 대출액 1조 3,025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1인당 학자금대출 금액은 1,136만원이었다. 국·공립 대학원생 누적 인원은 2만 8,897명, 대출액 2,582억원, 1인당 대출액은 894만원이었다.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증가는 무엇보다 고액 등록금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난 속에서 학문후속세대이자 고급인력인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고액의 대학원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원생 인권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인권관련 문화는 대학생의 인권 인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대학생들의 인권의식은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전체 사회로까지 확산된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겪는 대학생들의 인권문화와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대학의 인권 문화는 낙후하며, 교수들의 대학원생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oustang 간 교수의 변집에 가서 개밥을 줬다
교수가 이사할 때 이삿짐을 나르고, 교수 아들 생일파티 때 풍선을 붙고, 교수 아내 비행기 표도 예매해줬다
교수로부터 여자는 나이 들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일찍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많이 해도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을 들었다

위 사례는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가 주최한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나온 대학원생들의 피해 사례다. 또한 대학원생 인권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생 1,352명 중 11.1%는 비서처럼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교수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들은 대학원생도 19.8%였으며, 술자리 등에서 분위기 고조를 강요당했다는 대학원생도 19.2%나 됐다.33)

33) 김한솔, “서울대 교수, 대학원생을 ‘개인비서’로…인권 침해 실태행, 『경향신문』, 2012.10.10.
서울대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이후 대학원생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며, 인권침해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2014년에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와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14곳이 설문조사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은 더욱 심각해, 조사대상 2,354명의 대학원생 중 45.5%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적노동, 저작권 편취 등의 부당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1〉 부당처우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 여부

![차트]

유형별로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등 개인존엄권 침해 경험이 31.8%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 자유, 사적노동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침해가 25.8%, 물질적 대가 요구 등의 학업연구권 침해가 20.2%, 저작권 침해 9.5% 순이었다.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에는 나온 아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인권침해 사례처럼 개인 심부름을 뿌려고 논문심사 과정에서의 폭언 및 금품요구 등
피해 사례 또한 다양했다.

교수가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직, 더 나아가 향후 학문세계에서의 ‘생사역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다. 특히, 2015년 7월 발생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4년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중대 학원생 인권침해 사례〉

| 교수님 자녀들의 학교 숙제, 과제, 에세이 등을 대필해 준적이 있고, 개인적인 종교행사에 동원되어 참석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
| 논문 심사 날 다과를 준비하였는데 ‘이런 싸구려를 가 замеча라, 논문 두 번 다시 못 쓸 줄 알았어’라며 자기에게 임대인지면서 폭언과 폭행 위협까지 가봤습니다 |
| 학위논문 심사저마비 명목으로 심사위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이는 대학생수준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심사 종 한우나 고급일식당급의 식사를 여러 차례 제공하도록 강요받으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사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 학위과정에서 자르겠다고 깊은 협박을 하시면서 교수님 부인의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
| 명절마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


또한 교육부장관에게도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원생 인권문제는 쉬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한 대학은 2016년 61개 대학에서 만들어졌으며,\(^{34}\) 올해 들어 동국대, 서강대 등이 추가로 했을 뿐이다.

더욱이 대학들이 '보여주기 색'의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할 뿐 실제 학생들의 처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인권센터도 전국 237개 대학 중 19교만 설치\(^{35}\)했다.

대학들은 "이미 인권센터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이 있다"거나 "추가 비용 들여 인권센터를 만들 정도로 인권참여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36}\)을 보이며 인권센터 설치를 차질피할 미루고 있다.

인권센터가 있다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 아동의 문서 스파이를 지시해 이른바 '짧만대장경 스파이 노예 사건'으로 불린 사건의 당사자인 A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을 뿐, 별도의 정례요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 일뿐 강제성이 없다.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인권센터 설치를 대학 자율에 맡겼다는 대학원생 인권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최근 발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한 폭발물 사건과 교수의 논문표절을 대자

\(^{34}\) 곽주현. "우리 권리는 스스로 지키자" 대학원생 권리장전 줄여. 『한국일보』, 2017.7.21.

\(^{35}\) 윤석만. "가슴 파인 옷 입어요" 상습 성희롱에 교수의 꿈 접는 조교들. 『중앙일보』, 2017.7.28.

\(^{36}\) 신은별. 교수 막말·갑질 어디에 말하죠... 대학 10곳 중 1곳만 인권센터. 『한국일보』, 2017.7.21.

\(^{37}\) 김명지. 서울대 인권센터 '짧만대장경 노예 대학원생' 교수에 징계 없다. 『노컷뉴스』, 2016.6.21.
보를 통해 고발한 일련의 사건은 대학원생 인권침해로 인한 문제가 폭발 일본 직전
임을 보여준다.

이에 국회에서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8238)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나서 대학원생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
워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학생연구비 갈취


대학원생 연구비도 대체로 앞의 법·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교수들이 정부나 기업의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면 그에 따른 참여연구원(대학원생 등)의 인건비 비율 등이 정해지고, 이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A교수는 대학원생 등 연구원 15명이 받은 인건비와 장학금 1억 2천여만원을 A교수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이 중 2억 4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특히, 연구원 1~3명이 토장을 한꺼번에 가져와 전액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을 하고. 이들 본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은행 CCTV 촬영기록을 통해 드러남. 해당교수는 이에 인건비를 받기 전부터 연구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1인당 30만~30만원)과 예약 자동이체일을 자신의 통장에 지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남.

B교수는 보조연구원인 인건비 10억여원 중 6억 4천여만원을 공동 관리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여 본인의 개인 카드 이용대금 결제, 정기적금 불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C교수는 참여연구원 14명의 인건비 및 여비 3억여원과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 6천여 만원까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 이중 3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천여만원을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

그런데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건비·장학금 등(이하 연구비)을 갈취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위 사례는 지난 2011년 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연구개
발사업 지원·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난 사례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연구비를 어떻게 갈취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또 아래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연구비를 갈취한 사례가 실린 기사다. 모두 지난 6월에 보도된 기사로, 최근 까지도 대학원생의 연구비 갈취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연구원 인건비 '굴꺽'…대학교수 2명 징역 1년6월 | 38 |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7개 연구과제(의료정보서비스 관련 등)를 공동으로 수행한 학생 연구원들에게 줄 인건비 등 4억 원을 가로챈 화의 국립대 A교수와 사립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 권익위, 제자 인건비 5억 빼돌린 대학 교수 적발 | 39 |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자(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 등이 직발했다고 밝혔다. 사립대 C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대 표 학생에게 맡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3억7400만원을 빼돌렸다. 또 지방의 사립대 D교수는 2012~2016년 14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생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6800만원을 빼돌렸다. |

| 연구비 등 12억 허위 청구한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 40 |
|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 10억원 연구비를 가로챈 서울대 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대 화학물리학부 할묘 교수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비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학생연구원들이 나오는 곳은 180만원, 박사과정 연구원 중 250만 원씩의 인건비를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학생들에겐 짐작하는 금을, 심지어 연구원을 하위로 등록하고 그 돈을 습격 가로채기도 했다. 경희대 의과대학 박모 교수와 고려대 식품공학과 우모 교수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각 인건비 3억 5천만 원, 1억 9천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

학생 연구비 갈취가 끊이지 않자 정부 또한 그때마다 제도개선 방안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학생 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박태우. 학생연구원 인건비 ‘굴꺽’…대학교수 2명 징역 1년 6월.『경향신문』. 2017.6.15.
39) 채움배. 권익위, 제자 인건비 5억 빼돌린 대학 교수 적발.『뉴스』. 2017.6.19.
40) 김창일. 10억원 연구비 가로챈 서울대 교수 ‘구속’…비위 얼룩진 상아탑. 2017.6.23.
우선 지난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R&D 관리제도 개편안"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41)을 개정해 “석·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금지”했다. 이는 교수가 개인에게 지급된 학생연구비를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해, 학생연구비 갈취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 조치이다.

또한 연구비 통괄관리제도를 도입해, 연구자 개인이 아닌 대학에서 통괄 관리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은 연구비를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도입된 제도로 학생 연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인건비 풀링제)가 있다. 제도 활성화와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2009년부터 통합관리 제도 대학을 선정해오고 있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학생 연구비는 과제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나 과제별로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되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교수)단위로 통합하여 연구책임자(교수) 단위에 참여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효과는 미미했다. 제도 개선 시행 2년 후인 2010년 12월 정부가 “일부 대학교수의 도덕적 해이로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학생인건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금 “연구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해당 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제도 도입”(당시 지식경제부 사업에 우선 적용)과 관

41) 국가R&D 관리제도 개편 내용 중 하나임. 정부는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관리 규제의 폐지 혹은 대폭 완화 △R&D사업 추진상의 비효율적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가R&D 관리제도 개편을 발표함.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 보도자료, 2008.5.
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의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를 발표했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처럼, 학생연구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기 부지기수였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연구비를 지급하면, 이는 다시 교수들의 호주머니로 돌아갔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2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 상한만 있고 최소 기준이 없어, 연구책임자인 교수 재량으로 학생연구원의 실지급액이 결정되며 정부연구과 제 참여학생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43}\).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부의 1억원 이상 연구과제 참여 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보장하고, 실제로 그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생들간 반응은 차가웠다. 학생들은 월 80만원 보장이 물론 과 거보다는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80만 원을 6개월 모박 모아야 등록금이 마련되는 것, "교수를 신고하라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교수와 학생이 지배 복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44}\)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후 2015년 4월,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연구비 유통 시 연구비 환수 외에도 유용 금액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부 가금 징수와 연구비 유통 사실이 3번재 적발된 연구자는 10년 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삼전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특히 교수의 학생 인건비

\(^{42}\)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머리, 보도자료, 2010.

\(^{4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보도자료, 2012.

\(^{44}\) 최하얀, 등록금 갚치는 교수님…신고하라고?, 『프레시안』, 2012.10.25.
유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인 5년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의 제재조치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학생은 여러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 인건비를 받는데, 다른 학생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 이에 지금의 연구비를 건어 연구실 운영비와 전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46]

그러나 앞서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연구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다 개인이 유용한 사례들로, 공동 관리 자체를 금지시킨 제도개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 개인이 유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 아닌 관행 운영하며 법·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대학 또한 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연구비 갈취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처럼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교수가 연구과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좌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실적과 적게라도 장학금이나 인건비를 받기위해 교수의 지시

45) 감사원.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
46) 김경필·최아리. 대학원생 쟁취취하나 파업치범 된 교수들. 「조선일보」, 2017.7.11.
따라서 정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비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대학의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조교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균관대 조교 임용규정

제2조(조교의 종류)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로 구분한다.

제3조(직무) ① 연구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소속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② 교육조교는 제4조의 기관장(이하 “조교장”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 교육과 학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③ 조교장은 필요한 경우 조교로 임용하여 학사에 관한 행정사무만을 보좌하는 자를 지정하여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임용자격) 조교는 대학졸업이상의학력과 소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우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수당) ① 연구조교에게는 지도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일정액 이상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연구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조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교육조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며, 제3조제4항의 교육조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양대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조교는 보수지급의 형태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을 감면 받거나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장학조교와, 급여를 지급 받는 유급조교로 구분한다.

제4조 ① 조교는 본교 대학원(이하 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동일 전공 또는 관련 전공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학사 사무를 보조하는 장학조교

제6조 ② 유급조교는 의학 및 의학·간호 분야의 실험·실습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장학조교의 경우 학기별로 6개월 단위로 임용하고, 유급조교의 경
위 대학의 사례처럼 사립대학 조교는 대체로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학사에 관한 행정사무만을 보좌하는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대학 조교는 또한 크게 정해진 등록금을 감면 받거나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조교(장학 조교 등) 지도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일정액 이상의 연구비 등을 지급받는 조교(연구 조교 등) 대학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조교(유급조교, 행정조교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명칭과 임금 등은 대학마다 상이하 다.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제약하는 형태가 많다.

강원대 조교 임용규정

제2조 조교의 자격
①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제3조의6 행위금지
① 조교는 임용기간 동안 주간 대학원에 진학 또는 수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임무 이외에 강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직
① 조교는 본직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겸직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이 허가하면 겸직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분
조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국고조교 :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
2. 대학조교 : 대학회계에 재원으로 임용된 조교
3. 실험실습전문조교 : 대학조교 중에서 3개 학과(프로그램)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연평균 30시간 이상 활용하는 학교지원시설 문제도대학 직속의 교육용실습실·문서실에서 실험 및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

제4조 자격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 국립대학의 사례처럼,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조교와 대학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체조교를 두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학업전념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조교를 두거나, 연구실 등에서 실험·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를 두기도 한다.

한편,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해 임용하며, 재임용 횟수는 2~4회 등 대학마다 다양하다. 임금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2 관련)'의 해당 호봉의 월급액에서 112,900원을 뺀 것으로 하고 있다. 조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조교 임금을 장학금, 학비감면 등의 형태로 지급하여 노동관계법을 외면하고 있다. 대학은 노동관계법 관련 위반도 피해갈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원생 조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4대보험 가입이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수들의 '소위 갑질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가 대학원생 조교의 퇴직금·수당을 주지 않는 총장과 법인이사장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이후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

4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2017. 1. 6. 개정〉
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중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48]\)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허용하나, 여전히 학생 신분의 조교가 임금이 아닌 장학금 또한 학비감면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이 아닌 임금을 받는 조교라도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있다. \[49]\)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해석하면 여전히 학생 신분의 조교가 임금이 아닌 장학금, 한 학비감면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다.\[49]\)

지난해 5월 서울대 사태도 이에 해당하며, 이는 서울대가 기간제법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한 꼬수를 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가 5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대는 비학생조교의 기간제

\[48]\)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익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격의 대 상적(對償의)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는지 및 근로지급제도의 문절로 변동이 없으며 그 지급, ⑨근로자의 근로기준법 규제상외의 사항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의 문절과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49]\) 고용노동부, '노동부·조교·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 동국대 사건 주목' 기사 관련 설명. 보도설명 자료, 2017.9.7.
법적용과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22일 비학생조교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 이후 임금 등의 협상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와 비학생조교 노조 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학생조교 3명을 평가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5. 8. 27. 선고 2015노5558 판결문 (요약)

루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홍보•기획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기)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루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루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대학들은 대학원생 등을 조교로 임용해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 보다는, 조교의 정당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보다 명확한 조교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육부에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조교 현황 △대학별 조교 처우 현황, 대학별 조교 관련 규정 △주권 중인 ‘조교제도 개선방안’ 관련 정책 일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는 국립대 조교 현황과 규정 밖에 없었다. 특히 추진 중인 조교제도 개선방안 관련 허리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조교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조교제도 개선과 관련한 계획도 없다. 조교의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담당부서일 수 있겠지만, 교육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50) 김원진, ‘계약만료’ 서울대 비학생조교 33명의 눈물, 『경향신문』. 2017.3.2.
고(高)스펙 취업난 시대

취업만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기에 취업률의 높고 낮음을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대학원 진학목적 중 전문직 취업(32.2%)과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입직(21.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학기간 학업에 대한 노력과 및 천만 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취업률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 증가했다. IMF 임직원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보다 높은 의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체감청년실업률 또한 22.5%로 증가했다. 2015년 8월 22.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난의 여파는 대학원생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표10-1〉은 건강보험 DB와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한 취업률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보면 2015년 기준 일반대학원의 취업률(취업률1)은 77.4%이다. 2011년 78.9%였던 취업률에 보다 1.5%p 하락했다.

51) 지표의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상 실업자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 중인 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적인 취업가능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실업률을 나타낸.
52) 이훈철・김현철. 8월 실업자 100만명 IMF위기 비끼 … 청년실업 심각. 『뉴스1』. 2017.9.13.
53) "대학알리미" 상 취업현황 자료는 1.2차를 나누어서 공개하고 있음. 1차는 건강보험 DB만을 가지고 조사한 수치이며, 2차는 건강보험DB와 국세DB를 연계한 자료임. 보다 정확한 취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조사 자료를 사용함.
 더욱이 입학당시 취업을 하고 있던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취업률2)은 66.4%(2015년 기준)로 더욱 낮다. 또한 2011년 75.2%보다 8.8%p 하락했다.

### 표10-1 2011~2015년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1년</th>
<th>2012년</th>
<th>2013년</th>
<th>2014년</th>
<th>2015년</th>
</tr>
</thead>
<tbody>
<tr>
<td>졸업자</td>
<td>38,199</td>
<td>42,558</td>
<td>42,174</td>
<td>42,499</td>
<td>41,678</td>
</tr>
<tr>
<td>취업률 산출 졸업자(A)</td>
<td>31,478</td>
<td>34,420</td>
<td>33,671</td>
<td>33,501</td>
<td>33,239</td>
</tr>
<tr>
<td>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td>
<td>23,384</td>
<td>25,476</td>
<td>24,572</td>
<td>24,075</td>
<td>23,898</td>
</tr>
<tr>
<td>해외 취업자</td>
<td>47</td>
<td>52</td>
<td>54</td>
<td>50</td>
<td>34</td>
</tr>
<tr>
<td>영농업 종사자</td>
<td>3</td>
<td>1</td>
<td>4</td>
<td>8</td>
<td>3</td>
</tr>
<tr>
<td>개인 창작활동 종사자</td>
<td>9</td>
<td>1</td>
<td>3</td>
<td>18</td>
<td>16</td>
</tr>
<tr>
<td>1인 창(사)업자</td>
<td>410</td>
<td>272</td>
<td>474</td>
<td>395</td>
<td>504</td>
</tr>
<tr>
<td>프리랜서</td>
<td>969</td>
<td>1,326</td>
<td>1,159</td>
<td>1,276</td>
<td>1,268</td>
</tr>
<tr>
<td>소계 (B)</td>
<td>24,822</td>
<td>27,128</td>
<td>26,266</td>
<td>25,822</td>
<td>25,723</td>
</tr>
<tr>
<td>기타</td>
<td>6,397</td>
<td>6,890</td>
<td>6,925</td>
<td>7,264</td>
<td>7,189</td>
</tr>
<tr>
<td>미상</td>
<td>259</td>
<td>402</td>
<td>480</td>
<td>415</td>
<td>327</td>
</tr>
<tr>
<td>입학당시 기취업자(D)</td>
<td>4,664</td>
<td>11,460</td>
<td>11,439</td>
<td>11,453</td>
<td>10,897</td>
</tr>
<tr>
<td>고등교육법 상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내 취업(E)</td>
<td>597</td>
<td>827</td>
<td>764</td>
<td>815</td>
<td>949</td>
</tr>
<tr>
<td>취업률1(B/A)</td>
<td>78.9</td>
<td>78.8</td>
<td>78.0</td>
<td>77.1</td>
<td>77.4</td>
</tr>
<tr>
<td>취업률2[(B-D)/(A-D)]</td>
<td>75.2%</td>
<td>68.2%</td>
<td>66.7%</td>
<td>65.2%</td>
<td>66.4%</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 부설 대학원 대상(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각 연도
3)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졸업자는 각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대상)
4) 취업률 산출 졔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의 대상
5) 기타 : 조사기준일(각 연도 12월31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미상 : 조사기준일(각 연도 12월31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7) 입학 당시 기취업자 : 조사기준일(각 연도 12월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 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진 자
8) 교내취업자 : 조사기준일(각 연도 12월31일) 당시 대학(학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포함에 취업한 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자로서 사업장, 학교산업단, 학교기업 등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9) 교내 취업의 ( )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교내 취업자 비율
10) 취업률2 : 입학당시 기 취업자 제외 취업률

반면,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취업자는 늘어났다. 2015년 취업자 중 교내취업자는 949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에 해당한다. 2011년에 비해 352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취업자 중 교내취업자 비율 또한 1.3%p 증가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규모가 커지고, 산·학·연협력기술주회사 등이 설립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 학교기업의 연구원 등으로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폄 이된다.

전문대학원 취업률 또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표10-2)를 보면, 석사학위 과정 2016년 취업률은 56.6%에 불과하다. 2012년 73.4%였던 취업률이 16.8%p나 낮아진 것이다. 박사과정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해마다 하락해, 2012년 78.6%였던 취업률은 2016년 60.5%로 기록했다.

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이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업에도 취업률은 대단히 낮았다. 이는 전문대학원의 취업률 조사가 일반대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 2월 졸업자의 취업률을 12월 말 조사한 수치이지만, 전문대학원은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취업률 조사기점 이후인 4월 중순에나 이루어지며, 합격률도 해마다 낮아져(55) 취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54)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대학(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제휴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영리활동 수행.
55)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시행된 첫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래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등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치러진 6회 시험에서는 51.45%로 응시생의 절반 가량이 탈락함.
안혜성.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해결, 로스쿨생들 나섰다. 광주속보, 2017.9.28.
특수대학원 취업률도 하락세다. 2012년 79.8%에 달했던 취업률은 2016년 64.8%로 하락했다. 그나마 전문대학원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특수대학원 교육목적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이기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도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일반대학원처럼 기취업자 등을 조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워, 취업률이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과 같이 일반대학과 조사시기와 다르기에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실태진단

표 10-3 2012~2016년 특수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12년</th>
<th>2013년</th>
<th>2014년</th>
<th>2015년</th>
<th>2016년</th>
</tr>
</thead>
<tbody>
<tr>
<td>학위취득자</td>
<td>39,698</td>
<td>39,215</td>
<td>38,339</td>
<td>37,753</td>
<td>37,240</td>
</tr>
<tr>
<td>취업률 산출 학위취득자</td>
<td>38,141</td>
<td>37,738</td>
<td>36,568</td>
<td>36,040</td>
<td>35,637</td>
</tr>
<tr>
<td>취업자</td>
<td>30,429</td>
<td>28,353</td>
<td>27,252</td>
<td>25,095</td>
<td>23,080</td>
</tr>
<tr>
<td>기타</td>
<td>3,544</td>
<td>5,997</td>
<td>5,876</td>
<td>6,553</td>
<td>7,494</td>
</tr>
<tr>
<td>미상</td>
<td>4,168</td>
<td>3,388</td>
<td>3,440</td>
<td>4,392</td>
<td>5,063</td>
</tr>
<tr>
<td>취업률</td>
<td>79.8</td>
<td>75.1</td>
<td>74.5</td>
<td>69.6</td>
<td>64.8</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 (사 예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학위취득자 : 각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대학원별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수
3) 취업률 산출 학위취득자 = 학위취득자 - 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4) 취업자 : 각 연도 4월 1일 기준 취업한 자

학부생 취업률이 2015년 기준 64.6%임을 감안하면, 대학원 취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경제부양으로 인한 청년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학원생은 ‘비정년트랙 교원’, 시간강사 등 고학력자의 일자리 점이 나빠지고, 대학과 기업들의 외국학위자 선호가 여전해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표10-4〉를 보면 2010년 대비 2013년 ‘비정년트랙 교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에 비해 급여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교원이다. ‘비정년트랙 교원’ 증가는 교원의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강사 또한 마찬가지다. 임금이 낮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실도 제대로 마련한

되지 않아 수업준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 정책과 대학의 꼼수로 인해 대량 해고되는 등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은 매우 낮다.

### 표 10-4 2010~2013년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

(단위 : 명, %)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비정년트랙교원 임용대학현황</th>
<th>비정년트랙 교원현황</th>
</tr>
</thead>
<tbody>
<tr>
<td></td>
<td>해당 대학(A)</td>
<td>미해당 대학(B)</td>
</tr>
<tr>
<td></td>
<td>인원</td>
<td>비율</td>
</tr>
<tr>
<td>2010년</td>
<td>62</td>
<td>15</td>
</tr>
<tr>
<td>2011년</td>
<td>65</td>
<td>13</td>
</tr>
<tr>
<td>2012년</td>
<td>71</td>
<td>12</td>
</tr>
<tr>
<td>2013년</td>
<td>71</td>
<td>11</td>
</tr>
<tr>
<td>증감 ('13-'10)</td>
<td>9</td>
<td>- 4</td>
</tr>
</tbody>
</table>

1) 사립 일반·산업대학 대상 (자료미제출 및 일반대 공적대학의 수용 이전 연도 제외)
2) 2013년은 6월 기준
※ 국회의원 유은혜, 최근 4년 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두 배 이상 늘어, 보도자료, 2013.11.4.

한편, 정부는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도, 처우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며 반대했고, 대학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사이 2013년 1월

---

57) 대학교육연구소, Ⅲ-1. 교직원(교원), 『대학교육통계(기본)』, 2016-17년 4호, 2016.
58) 권형진, 대량해고 부르는 강사법 폐기하라 … 시간강사를 다시 거리로, 『뉴스1』, 2017.8.23.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학들의 외국박사 선호 현상도 쉬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10-5>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전임교원 비율은 38.8%다. 2012년 39.5%에서 불과 0.7% 하락했을 뿐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표10-5> 2012~2016년 대학 전임교원 최종 학위 국적별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박사</th>
<th>석사</th>
<th>학사</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원</td>
<td>비율</td>
<td>인원</td>
<td>비율</td>
<td>인원</td>
</tr>
<tr>
<td>2012년 국내</td>
<td>37,093</td>
<td>60.5</td>
<td>31,648</td>
<td>61.6</td>
<td>4,882</td>
</tr>
<tr>
<td></td>
<td>국외</td>
<td>24,254</td>
<td>39.5</td>
<td>19,749</td>
<td>38.4</td>
</tr>
<tr>
<td></td>
<td>합계</td>
<td>61,347</td>
<td>100.0</td>
<td>51,397</td>
<td>100.0</td>
</tr>
<tr>
<td>2013년 국내</td>
<td>37,413</td>
<td>60.0</td>
<td>32,148</td>
<td>61.3</td>
<td>4,689</td>
</tr>
<tr>
<td></td>
<td>국외</td>
<td>24,942</td>
<td>40.0</td>
<td>20,262</td>
<td>38.7</td>
</tr>
<tr>
<td></td>
<td>합계</td>
<td>62,355</td>
<td>100.0</td>
<td>52,410</td>
<td>100.0</td>
</tr>
<tr>
<td>2014년 국내</td>
<td>38,404</td>
<td>60.4</td>
<td>33,259</td>
<td>61.6</td>
<td>4,597</td>
</tr>
<tr>
<td></td>
<td>국외</td>
<td>25,213</td>
<td>39.6</td>
<td>20,740</td>
<td>38.4</td>
</tr>
<tr>
<td></td>
<td>합계</td>
<td>63,617</td>
<td>100.0</td>
<td>53,999</td>
<td>100.0</td>
</tr>
<tr>
<td>2015년 국내</td>
<td>39,407</td>
<td>61.0</td>
<td>34,204</td>
<td>62.2</td>
<td>4,620</td>
</tr>
<tr>
<td></td>
<td>국외</td>
<td>25,209</td>
<td>39.0</td>
<td>20,829</td>
<td>37.8</td>
</tr>
<tr>
<td></td>
<td>합계</td>
<td>64,616</td>
<td>100.0</td>
<td>55,033</td>
<td>100.0</td>
</tr>
<tr>
<td>2016년 국내</td>
<td>39,441</td>
<td>61.2</td>
<td>34,667</td>
<td>62.4</td>
<td>4,300</td>
</tr>
<tr>
<td></td>
<td>국외</td>
<td>25,031</td>
<td>38.8</td>
<td>20,914</td>
<td>37.6</td>
</tr>
<tr>
<td></td>
<td>합계</td>
<td>64,472</td>
<td>100.0</td>
<td>55,581</td>
<td>100.0</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전임교원 대상

외국박사 선호 현상은 서울 주요 대학이 더욱 심하다. 2016년 경희대, 고려대, 서
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전체 전임교원 중 외국 학위 전임교원의 비율 55.3%에 달한다.

〈표10-6〉 2016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전임교원 최종 학위 국적별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박사</th>
<th>석사</th>
<th>학사</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원</td>
<td>비율</td>
<td>인원</td>
<td>비율</td>
<td>인원</td>
</tr>
<tr>
<td>국내</td>
<td>4,771</td>
<td>44.7</td>
<td>4,437</td>
<td>45.2</td>
<td>311</td>
</tr>
<tr>
<td>국외</td>
<td>5,892</td>
<td>55.3</td>
<td>5,371</td>
<td>54.8</td>
<td>494</td>
</tr>
<tr>
<td>합계</td>
<td>10,663</td>
<td>100.0</td>
<td>9,808</td>
<td>100.0</td>
<td>805</td>
</tr>
</tbody>
</table>

1) 서울 주요 10개 대학 :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2)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대학원과 대학원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서울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입학정원의 40% 이상,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11-1〉과 〈표11-1〉을 보면, 2017년 일반대학원은 서울 41개(22.8%), 서울 외 31개(17.2%)로 수도권에 일반대학원의 40.0%(72개)가 몰려있다.

〈그림11-1〉 2017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 현황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은 집중도가 더 높다.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44.6%(2만 6,840명)나 된다. 서울지역 대학원 입학정원은 지방(2만 7,402명, 45.5%) 전체의 입학정원과 맞먹을 정도다. 더욱이 2017년 학부의 서울지역 입학정원(7만 2,324명)이 전체 입학정원(31만 1,913명)의 23.2%임을 보면, 대학원의 서울지역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서울지역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전체 전문대학원(185개)의 절반 이상인 102곳(55.1%)이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다. 입학정원 또한 59.7%인 8,728명을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서울지역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전체 전문대학원(185개)의 절반 이상인 102곳(55.1%)이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다. 입학정원 또한 59.7%인 8,728명을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명이 서울지역이었다.

다른 대학원에 비해 많지만, 특수대학원도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원 수 31.1%(248개), 입학정원 38.6%(1만 9,553명)가 서울지역이다.

〈표11-1〉 2017년 지역별 대학원 수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원수</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td>
<td>41</td>
<td>31</td>
<td>72</td>
</tr>
<tr>
<td></td>
<td>22.8</td>
<td>17.2</td>
<td>40.0</td>
</tr>
<tr>
<td>전문</td>
<td>102</td>
<td>28</td>
<td>130</td>
</tr>
<tr>
<td></td>
<td>55.1</td>
<td>15.1</td>
<td>70.3</td>
</tr>
<tr>
<td>특수</td>
<td>248</td>
<td>141</td>
<td>389</td>
</tr>
<tr>
<td></td>
<td>31.1</td>
<td>17.7</td>
<td>48.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인원</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26,840</td>
<td>5,926</td>
<td>32,766</td>
</tr>
<tr>
<td></td>
<td>44.6</td>
<td>9.8</td>
<td>54.5</td>
</tr>
<tr>
<td>전문</td>
<td>8,728</td>
<td>2,293</td>
<td>11,021</td>
</tr>
<tr>
<td></td>
<td>59.7</td>
<td>15.7</td>
<td>75.4</td>
</tr>
<tr>
<td>특수</td>
<td>19,553</td>
<td>8,193</td>
<td>27,746</td>
</tr>
<tr>
<td></td>
<td>38.6</td>
<td>16.2</td>
<td>54.7</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 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대상 (사)아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지역 구분: 대학원 캠퍼스 설치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지방 대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원 보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서울지역 대학원에 비해 떨어진다. 지방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 일반대학원의 기피현상은 학문이론이나 학술연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도 힘들어지게 한다.
표 11-2를 보면, 2017년 지방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률은 80.7%로 수도권 84.9%에 비해 4.2%p 낮은 수치다. 그러나 지방 광역시 지역은 81.4%였으나,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 불과했다.

2014년 이후 신입생 충원률 추이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감소하는 했지만 지방 감소율이 더 크다. 서울지역의 2014년 대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은 5.4%p 감소한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11.5%p나 감소했고, 광역시 외 지역은 6.0%p 감소했다.

더군다나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년 서울지역 경쟁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서울지역 외에는 지원자가 적다는 것이다.

표 11-2 2014~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및 경쟁률 현황 (정원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충원률</th>
<th>경쟁률</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91.1</td>
<td>91.6</td>
</tr>
<tr>
<td>서울외</td>
<td>85.6</td>
<td>87.4</td>
</tr>
<tr>
<td>계</td>
<td>90.2</td>
<td>90.9</td>
</tr>
<tr>
<td>광역시</td>
<td></td>
<td></td>
</tr>
<tr>
<td>광역시</td>
<td>92.9</td>
<td>90.6</td>
</tr>
<tr>
<td>광역시외</td>
<td>86.0</td>
<td>86.3</td>
</tr>
<tr>
<td>계</td>
<td>89.3</td>
<td>88.4</td>
</tr>
<tr>
<td>합계</td>
<td>89.8</td>
<td>89.7</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부속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구분: 본부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충원률 및 경쟁률 모두 정원내 기준  
5) 증감 = 2017년 - 2014년  
※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신입생 충원 현황, 각 연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를 살펴보면, 충원율이 '80%이상~90%미만' 대학원이 46개(25.7%)로 가장 많았고, '70%이상~80%미만'이 41개(22.9%)로 그 다음이었다. 신입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원도 27개(15.1%)였지만,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24개(13.4%)에 달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60%미만인 대학원 24개 중 서울지역 대학원은 2개에 불과했다.

〈표11-3〉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 (정원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60% 미만</th>
<th>60~70% 미만</th>
<th>70~80% 미만</th>
<th>80~90% 미만</th>
<th>90~100% 미만</th>
<th>100% 이상</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원수</td>
<td>24</td>
<td>14</td>
<td>41</td>
<td>46</td>
<td>27</td>
<td>27</td>
<td>179</td>
</tr>
<tr>
<td>비율</td>
<td>13.4</td>
<td>7.8</td>
<td>22.9</td>
<td>25.7</td>
<td>15.1</td>
<td>15.1</td>
<td>100.0</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설 대학원 대상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제외)
2) 신입생 모집 정지로 1개 대학원 제외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정원 내 모집으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공무원·군인 위탁생 등 정원 외 선발로 입학정원을 초과한다. 반면, 타 지역의 대학원은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표11-4〉에 나온 정원내와 정원외 입학 인원을 모두 합친 신입생 충원률을 보면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은 101.6%인 반면, 지방 광역시 일반대학원은 98.6%, 광역시 외와 수도권 서울 외 지역은 96.7%였다.

재학생의 중도탈락률도 지방의 일반대학원이 더 높다. 2016년 서울지역 일반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은 5.8%였지만, 지방 일반대학원 6.8%로 1.0% 높다. 〈표11-5〉 참조

-----------------------------
60)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5항에 따라 대학원도 입학정원 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표 11-4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률 현황
(단위 :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입학정원 (A)</th>
<th>입학인원</th>
<th>충원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정원내 (B)</td>
<td>정원외</td>
<td>소계 (C)</td>
</tr>
<tr>
<td>수도권</td>
<td>서울 26,840</td>
<td>23,012</td>
<td>4,266</td>
</tr>
<tr>
<td></td>
<td>서울외 5,736</td>
<td>4,643</td>
<td>905</td>
</tr>
<tr>
<td></td>
<td>계 32,576</td>
<td>27,655</td>
<td>5,171</td>
</tr>
<tr>
<td>비수도권</td>
<td>광역시 13,150</td>
<td>10,703</td>
<td>2,266</td>
</tr>
<tr>
<td></td>
<td>광역시외 14,252</td>
<td>11,406</td>
<td>2,375</td>
</tr>
<tr>
<td></td>
<td>계 27,402</td>
<td>22,109</td>
<td>4,641</td>
</tr>
<tr>
<td></td>
<td>전체 59,978</td>
<td>49,764</td>
<td>9,812</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3) 지역 구분 : 본교 캠퍼스 구분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구분 기준)
4) 입학정원의 차이는 학생모집정지로 인한 대학원 곳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차이임

## 표 11-5 2016년 지역별 일반대학원 중도탈락 현황
(단위 : 명,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재적생수</th>
<th>중도탈락인원</th>
<th>탈락률</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서울 66,902</td>
<td>3,859</td>
<td>5.8</td>
</tr>
<tr>
<td></td>
<td>서울외 13,620</td>
<td>822</td>
<td>6.0</td>
</tr>
<tr>
<td></td>
<td>계 80,522</td>
<td>4,681</td>
<td>5.8</td>
</tr>
<tr>
<td>지방</td>
<td>광역시 31,271</td>
<td>2,172</td>
<td>6.9</td>
</tr>
<tr>
<td></td>
<td>광역시외 32,796</td>
<td>2,167</td>
<td>6.6</td>
</tr>
<tr>
<td></td>
<td>계 64,067</td>
<td>4,339</td>
<td>6.8</td>
</tr>
<tr>
<td></td>
<td>전체 144,589</td>
<td>9,020</td>
<td>6.2</td>
</tr>
</tbody>
</table>

1)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부속 대학원 대상
2)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합산 기준
대학원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의 일반화 추세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 뿐 아니라 대학원에도 적용되어 대학원도 양적 팽창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이 양적팽창에 비해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정책은 오히려 대학원 정원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학원의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해, 지방의 학문후속세대로 고급인력 양성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BK21 사업 같은 대학원 중심의 재정지원 사업 또한 서울지역의 소위 명문대학과 과학기술특화 대학에만 집중되고 있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연구수행이나 조교로 일하며 학비를 벌려 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기 쉽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외국학위 선호현상 등으로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 대학원과 대학원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학원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원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길 것인지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학문후속세대로 고급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인력수요와 연동
전 정책이 절실하다. 학문후속세대와 고급전문인력 등의 양성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 되어지는 곤란하다. 지방의 학문후속세대가 사라질 위기인 지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또한 당겨져야 한다. 여기에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을 낮춰야 한다.

우선, 학업기간 중 학비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후 정부·대학·대학원생이 대학원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모색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 경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산정근거 없이 천차만별인 입학금은 대학과 대학원이 다르지 않다. 입학금 폐지 논의에 대학원 입학금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의 학비감면과 이중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을 30%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대학(학부)와 대학원 각각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등록금 이외의 기타비용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대학원마다 그 기준과 금액이 천차만별인 연구등록비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해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논문심사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문심사는 교수의 고유 학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려할 만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의 부당한 처우 개선이다.
교수와 대학원생의 간의 관계가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학문공동체로서 동지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과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동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연구비 갈취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이 연구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조교 임용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약을 맺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심의기구 등에 대학원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대학원생 스스로 대학운영에 참여해,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원생 실태 진단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만든이 : 대학교육연구소
펴낸날 : 2017. 10.